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 각급학교(기관) 계약업무 길잡이

2023. 12.





## 차 례

I. 기본 방향	1
II. 관련 근거	1
III. 적용 범위 및 대상	1
IV. 계약 지침	2
1. 계약 일반	2
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8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관리	10
4.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분리·분할발주 적용	14
5. 2단계 입찰	16
6. 협상에 의한 계약	19
7. 조달물품(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21
8. 예산절감 및 업무경감을 위한 통합계약	23
9.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24
10.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26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29
1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30
13.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34
14.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35
15.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구매 이행	36
V. 계약 청렴도 제고	39
VI. 행정사항	43
VII. 부록	44
1. 계약업무 처리지침 적용 관련 FAQ	44
2. 2022.1. 이후 개정된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58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  
**각급학교(기관) 계약업무 길잡이**

## I 기본 방향

- 수시로 개정되는 계약 관련 법령 속지와 변경된 계약 기준 안내
-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구매<sup>1)</sup> 및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전북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 II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회계예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조달청훈령

## III 적용 범위 및 대상

- (적용 범위) 공사·용역·물품 계약과 관련하여 법령 및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으로 한다.

1)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등

## IV 계약 지침

### 1. 계약 일반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계약의 원칙, 청렴서약제, 계약의 방법,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
	· 지방회계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자금관리
개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계약체결 요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의 방법 및 시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업의 종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경미한 건설공사 등
	· 전기공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의 제한, 경미한 전기공사,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 소방시설공사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등
행정 규칙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 지정 효력기간: 3년(2022.1.1.~2024.12.3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확인 • '22.1.1. 시행 이후 '22.4.1.과 '23.2.1.에 대상 품목 지정 내용 등 수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안공고 •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re)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개찰, 입찰의 취소, 재입찰 등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 시행일: 2023. 1. 1. • 적용기간: 2023. 1. 1.~2024. 12. 31. • 16개 광역시·도: 공사 249억원, 물품·용역 3.3억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장관)	• 시행일: 2023. 1. 1. • 적용기간: 2023. 1. 1.~2024. 12. 31. • 공사 83억원, 물품·용역 2.2억원

## ■ 계약업무 처리절차

구 분	업무 추진내용	
계획 수립 및 집행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및 집행방법) 및 예산집행품의</li> <li>(일상감사요청) 학교: 물품제조·구매,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li> <li>※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학교 우유 급식 제외</li> </ul>	
계약방법 결정 (추정가격)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 공사·용역·물품 :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 종합 4억 원 이하, 전문 2억 원 이하, 전기·소방·통신 1억6천만 원 이하</li> <li>용역·물품: 1억 원 이하</li> </ul>
	입찰	•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구매규격사전공개 *입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5일 이상 공개(긴급 3일)</li> <li>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li> </ul>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li> <li>(입찰)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40일, (수의계약 안내) 평일 3일</li> <li>(2단계입찰·협상)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40일</li> </ul>	
개찰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하여 집행관 PC에서 개찰	
적격심사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만 해당	공사·용역 (일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술·학술연구용역/물품: 공사/기술·학술연구용역/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li> <li>일반용역: 조달청 및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li> </ul>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낙찰자 결정 (계약상대자 결정)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 품질 등을 고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공사: 87.745%, • 용역·물품: 88% 또는 90%이상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후 선정</li> <li>2단계입찰: 규격·기술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대상 가격 개찰</li> <li>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하여 협상순위 결정</li> </ul>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업체에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li> <li>첨부서류: 입찰유 의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필요시), 과업내용서 등</li> <li>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징구)·인지세 납부 확인</li> <li>착수·작공 시: 착수(착공)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li> </ul>	
검사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요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li> <li>사후정산: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li> <li>하자보수보증금 징구</li> </ul>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가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li> <li>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li> </ul>	



## ■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방법

구 분		수 의 계 약		입 찰	
		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	지역제한	일반경쟁
종합 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 4억 원 이하	4억 원 초과 ~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sup>2)</sup>	적격심사	
전문 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전기/소방/ 통신 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 1억6천만 원 이하	1억6천만 원 초과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물품제조· 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8% (2천만 원 이하 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간행물 구매 90%	적격심사	
용역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5억 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1.5억 원 미만, 건설기술·설계및공사감리·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3.3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8% (2천만 원 이하 90%)	적격심사	

## ■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구 분		입 찰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 고 명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견적안내)기간		일반 7일, 긴급 5일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적격심사 여부		실시	미 실시
입찰(수의계약) 성립요건		유효한 2인 이상 참여	유효한 2인 이상 참여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징수 여부	징수	미징수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대상 해당 (전국 적용)	제재 대상 아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미 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지역제한 방법		광역시·도 단위 제한 (지점 불허)	시·군 단위 제한 가능 (지점 허용 선택 가능)
중복 제한 가능 여부		지역과 실적 중복 제한 불가 (다만, 중소기업자는 중복 제한 가능)	지역과 실적 중복 제한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반드시 이용	예외사항 존재

2)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예정가격 이하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비교

구 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대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sup>3)</sup>		물품 또는 용역	
금액기준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견적 수의계약</li> <li>중·소기업자 (대기업 제외)</li> <li>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의무없음</li> </ul>	2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견적 수의계약 (대기업 참여 가능)</li> </ul>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견적 수의계약</li> <li>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중·소기업자로 제한</li> </ul>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계약 안내공고</li> <li>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li> </ul>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계약 안내공고</li> <li>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추천 수의계약</li> <li>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조합추천업체(소기업, 소상공인 5개 업체)와 지명방식 가격경쟁으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li> <li>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li> <li>중기간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sup>4)</sup>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li> <li>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li> <li>적격심사<sup>5)</sup> 실시</li> </ul>
	1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li> <li>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li> <li>중기간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실시</li> </ul>	1억원 이상~ 고시금액 <sup>6)</sup>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li> <li>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li> <li>적격심사 실시</li> </ul>
			고시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li> <li>기업 제한없음</li> <li>적격심사 실시</li> </ul>

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5) (물품/기술·학술연구 용역)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조달청 및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6) (기획재정부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기간

- 관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지방계약법에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초일불산입의 원칙 등) 적용
- 입찰공고기간 계산
  - 공고(게시)일 + 공고기간(지방계약법령상 공고기간) + 입찰서 접수마감(개찰)일
- 공고게시기간 등

구 분	내 용
공고게시시간	공고일 24:00 이전까지 공고
전자입찰서 제출시간	전자입찰 시작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48시간 이상 부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근무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찰일시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

예시) 2023. 11. 13.(월)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법령상 공고기간: 평일 3일 이상)를 실시할 경우

- 공고게시일시: 2023. 11. 13.(월) 15:00
- 공고기간(3일): 2023. 11. 14.(화) ~ 2023. 11. 16.(목)
- 견적제출 개시일시: (1안) 2023. 11. 14.(화) 10:00(72시간 확보)  
(2안) 2023. 11. 15.(수) 10:00(48시간 확보)
-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3. 11. 17.(금) 10:00
- 개찰일시: 2023. 11. 17.(금) 11:00

##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 ■ 입찰의 취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변경 안내」(재무과-23201, 2019.11.15.)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연장 알림」(재무과-25167, 2020.12.29.)

###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구 분	유형	지침별	주요 내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 공사	전문 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행안부예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우리청지침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기준 변경 시 별도 안내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④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 ③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에 따른다.

- 계약업체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2~5개 업체 다자간 전자시담방식 권장
    - ※ 특히 중증장애인기업과 1인 수의계약방식으로 인쇄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북도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전자시담방식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확보
    -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수의계약 공정성 논란 민원 해소를 위해 동일한 업체와 1인 수의계약 체결 연 2회까지 가능(다만, 1천만 원 미만 소액계약은 제외,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은 연 2회로 제한)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6)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관리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 입찰공고, 입찰서의 제출, 개찰 및 낙찰 선언, 그 밖의 계약업무의 집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물품 제조·구매, 용역 수의계약/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공사 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간행물 구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금액 한도 없음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 가능 자원·재활용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계약·전자청구제 시행

##### • 전자계약

-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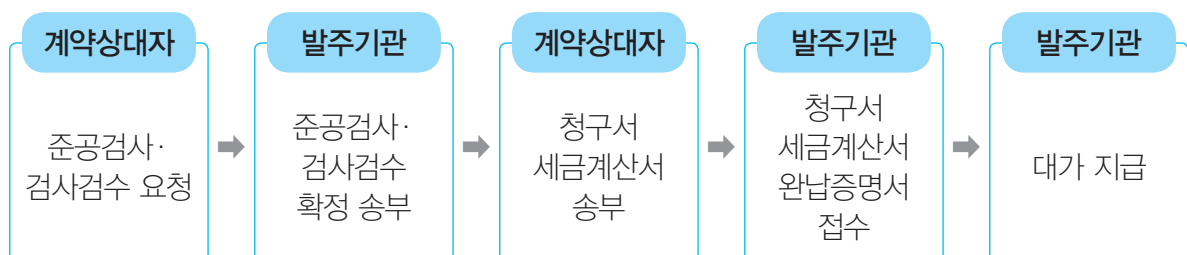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청구제

- 업체와 대면접촉 최소화로 부조리 요인 사전 차단 및 행정 소요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 계약업체 발주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최소화로 만족도 제고
- 업무처리 절차



-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 관련 근거

- ▶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 ▶ 국민연금완납증명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 ▶ 건강보험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 ▶ 고용보험·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

- 증명 방법

- ▶ 「계약대금 지급 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사실 증명에 관한 기준 안내」  
(재무과-14783, 2023. 7. 3.)

〈방법1〉 계약자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금요청 시에 계약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

※ 증명서 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도 가능

〈방법2〉 계약발주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하여 납부사실 확인

※ 계약자의 동의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업로드해야 함

〈참고사항〉

- 시행일: 건강보험(2016.8.4.), 연금보험(2015.12.23.), 고용·산재보험(2023.7.1.)
-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그 외 국가계약·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계약.
- 나라장터 계약 및 대금지급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가능(2023.9.1. 이후)
-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대표가 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증명서(주민등록번호 기준)를 제출받아야 함.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의 미표출 보험은 해당 보험 미가입 또는 신규 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 이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납부증명 의무가 없음.
- 4대보험이 전부 미가입 되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접수하여 납부증명 대상 아님을 공문으로 요청.



#### – 확인 방법

-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증명서 진위확인 협조 요청」(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정산부-2813, 2022. 7. 29.)
- ▶ 계약 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출결의 시, 대금요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예외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자의 납부증명서 제출을 기다리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제2항,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2항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제2항의 조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해당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특정인과의 임대차 계약 등
-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 가목<sup>7)</sup>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익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생략 가능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가목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4.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분리·분할발주 적용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 「공사 등 계약 발주 방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약방법 적용 안내」(재무과-14536, 2019.7.10.)

### ■ 주요 내용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 구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2014.11.21.) 도서정가제 시행
  - 「도서구매계약 관련 안내사항 통보」(재무과-6330, 2015.3.27.)
  - 신간 서적이 출판될 때 해당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부당하게 시기를 나누어서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현장체험학습 용역**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23.6.12. 개정)(도교육청 누리집/민주시민교육과 부서자료실)
  - 숙박, 식사, 운송, 프로그램 모두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고 운영하는 직영방식(분할계약)의 경우에는 경비(숙박비·식비·교통비·프로그램운영비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별 계약 방식 적용
  - 위탁방식(일괄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공개견적 또는 입찰로 집행
- **학습준비물**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알림」(학교교육과-2474, 2023.2.16.)
  - 교육과정 운영상 구입 시기 및 방법을 세분화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할 집행 가능
- **다수 품목의 조달물품과 비조달물품이 포함된 물품의 구분·집행**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품목(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리하여 조달 구매
  - 비조달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방법 결정

### ■ 분할계약 관련 유의사항

- 학생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적기발주 지원
- 사업의 목적·특성·발주 시기 등에 따라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낭비 요인 및 부당한 분할계약 사전차단(사전검토 항목 체크리스트 활용)
- 특정한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질의: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배 여부

재무과-9635(2019. 5. 7.)

- 같은 건물 내에 과학실 현대화사업과 가사실 현대화사업비로 예산이 각각 교부되어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각각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전기, 통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경우 제외) **분할계약 금지조항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예시)

(단위: 천원)

사업명	교부시기 (집행시기)	계약금액	계약공종	집행방법
과학실 현대화사업	4월(4월)	△△,000	실내건축공사업	1인수의
가사실 현대화사업	4월(4월)	○○,000	시설물유지관리업	1인수의

□ 답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38(2019. 5. 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및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분할계약 대상이 될 경우 가능하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분할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할계약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분할계약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사업계획, 설계서, 계약 내용,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5. 2단계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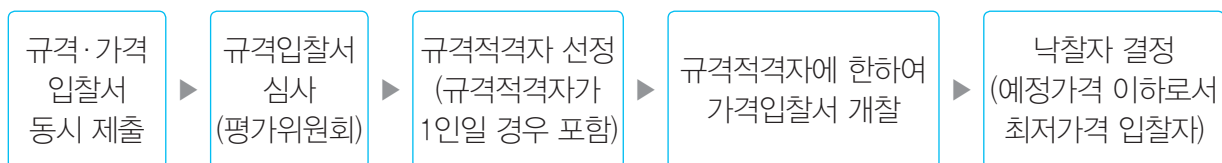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현장체험학습 2단계 입찰 및 조합추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감사담당관 -8348, 2014.12.12.)
-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2단계입찰 계약관련 제도 개선방안 알림」(재무과-4773, 2015.3.5.)
- 「2단계 입찰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안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350, 2023.4.18.)
-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안내」(재무과-11269, 2023.5.18.)

### ■ 적용대상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유사한 용역 등

###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절차



### ■ 처리 요령

- 입찰공고 기간 준수
  - 공고 기간을 준수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 〈2단계입찰 공고기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아래 기간 전에 공고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 재공고입찰, 긴급입찰: 10일

###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직접 또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 제출
- **공정한 제안서 평가 기준 마련**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체화
  - ▶ 객관적(정량적) 평가는 증빙서류(구체적 수치)에 의해 평가하므로 주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을 구체화하는 등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
  - ▶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객관적(정량적)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도록 유의
- 객관적(정량적) 평가는 사업(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적격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예: 70점 이상, 80점 이상 등)을 정하여 기준점수 이상 통과자에 대해서는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
  - ▶ 제안서 평가 시 기준 점수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해야 함에도 **상위 특정 1~2개 업체만 적격업체로 선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은 50% 이상 확보 권장
  -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교직원,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등), 해당 학교 학부모로 구성
-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계약 관련 공무원(학교장, 행정실장 등)은 평가위원 배제
-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 가능
- ❖ 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보안각서 징구

## ■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결정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되,
  - 지역 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각 교육청별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5억원”
-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적용 가능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 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교육청 계약업무 지침 적용
  - 지역 제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준용
  - 시행일: 2023. 7. 1.

## ■ 주의사항

- 입찰공고 기간, 지역 제한, 입찰서 접수·평가 절차,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자격(대표자, 입찰대리인 등) 확인 철저, 제안서 접수대장 구비 등 입찰 절차 준수
- 2단계 입찰 외 다양한 계약방법 적용
  - 사업의 목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 계약(맞춤형수학여행서비스, 맞춤형수학여행서비스(제주권) 등), 적격심사제 및 수의(총액) 등 다양한 계약방법 활용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출력하여 활용하고 불필요한 입찰서류 요구 지양

## 6. 협상에 의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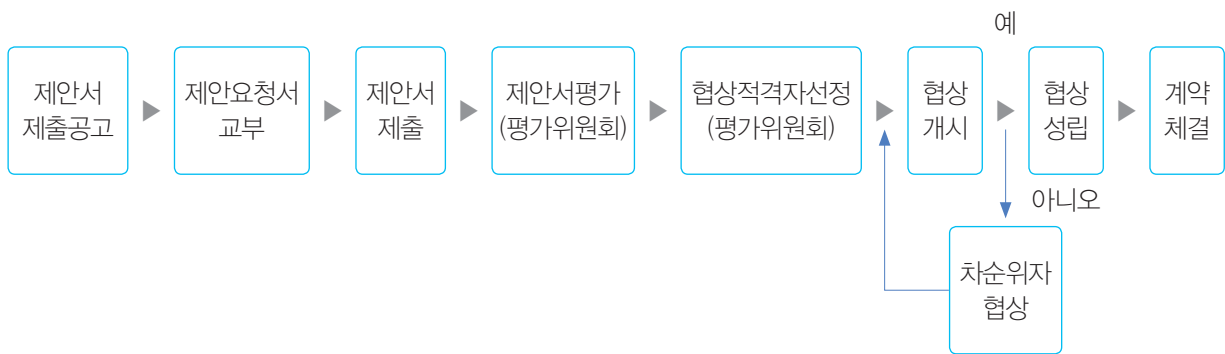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알림」(재무과-17980, 2021.9.27.)

### ■ 적용대상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 계약**  
 ※ 단순 물품구매와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에 우선 적용

### ■ 계약절차



### ■ 주의 사항

-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 요청**
-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사립학교·지자체·대학교 교직원만 가능)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그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함.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58, 2021.9.13.)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 공개
- 가격협상에 있어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조정 불가**



## 7. 조달물품(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 체결의 요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2023.7.1. 시행)

### ■ 내용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처리절차〉

- ①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체결
- ② (수요기관)분할 납품 요구
- ③ (계약업체)물품 납품 및 계약 이행
- ④ (수요기관)검사 검수 및 대가 지급

- **(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재무 상태 및 납품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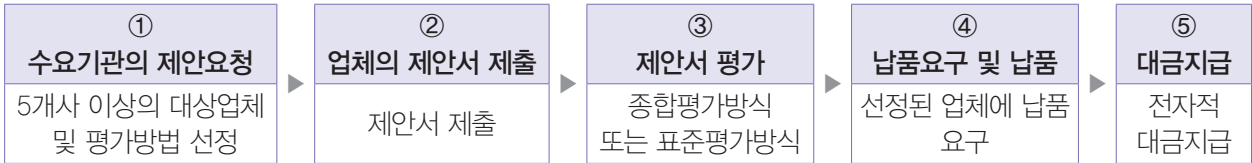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기 준	구 분	금 액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	▶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	▶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일 경우(선택)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품목인 경우	▶ 5천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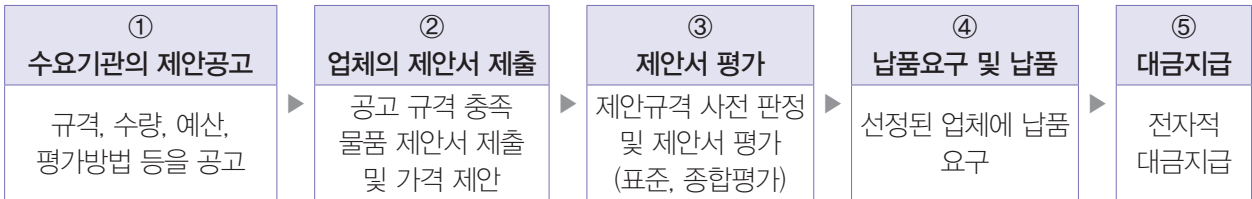
※ 품목 예시: 사무용기기(전자복사기, 인쇄기 등), 관급자재(냉난방기, 창호 등)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절차

### ▪ 제안요청(5억 원 미만)



### ▪ 제ان공고(5억 원 이상(의무), 5억 원 미만인 경우(선택 가능))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방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5]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종합평가	표준평가(2억원 이상)		표준평가(2억원 미만)	
			표준 I	표준 II	표준 I	표준 II
		배점	배점	배점	배점	배점
가 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60점	60	55	50	45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20점	15	15	20	20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20점	10	15	15	20
선 호 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이하	5	5	5	5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이하		5		5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이하	5		5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이하	5		5	
수출기업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이하		5		5
소 계		100점	100	100	100	100
신인도 (-1.75 ~ +2.5)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결과	-0.25점	-0.25	-0.25	-0.25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0.5	-0.5	-0.5	-0.5
	임금체불	-0.5점	-0.5	-0.5	-0.5	-0.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0.5	-0.5	-0.5	-0.5
	고용우수기업	+1점	+1	+1	+1	+1
	일자리 으뜸기업 등	+0.5점	+0.5	+0.5	+0.5	+0.5
	기술 인증	+1점	+1	+1	+1	+1

※ 가격 평가방식: A형(제안가격 비교, 최저가), B형(제안을 비교, 최저율)

※ 종합평가 방식은 평가항목 중에서 **자체 평가 기준에 맞도록 배점 자율 선택 가능**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종합평가방식 중 선택항목으로 **지역업체에 최대 7.5점 배점 부여 적용** 적극 검토(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 가목의 '물품·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 8. 예산절감 및 업무경감을 위한 통합계약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8조제3항
- 「각급학교 물품 구매계약 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지방교육재정과-58, 2011.3.3.)
- 「각급학교 물품 구매 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수립」(재무과-17027, 2011.8.31.)

### ■ 통합계약 적용 기준

구 분		적용금액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 아닌 물품	5천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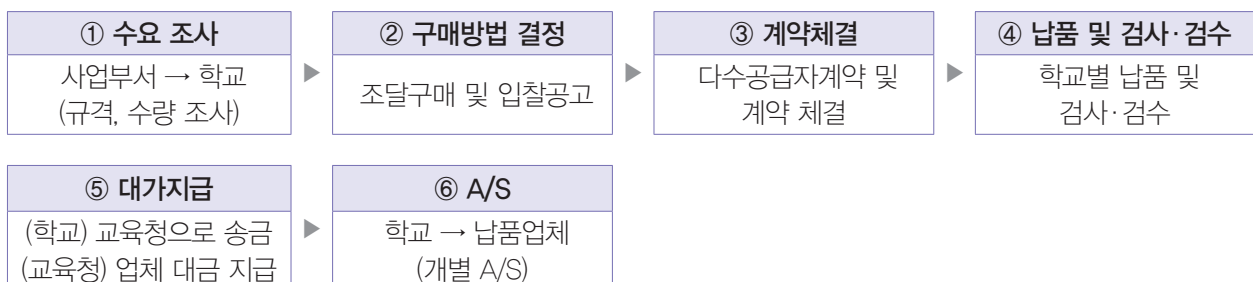
### ■ 대상 품목

구분	대 상
공사	•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중 자체 부서(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 난이도, 수행가능성, 경제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 ※냉난방기 시설 등
물품	•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TV, 비디오프로젝터, 모니터, 프린터(필수 7종) •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용역	•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통합계약이 가능한 용역 ※통학 차량 및 기타 통합 발주가 가능한 용역

### ■ 집행 방법

-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목적사업비 중** 사업내용과 규격 등이 유사한 **공사·물품·용역의 예산**은 각 기관별 통합계약 추진
  - ※ 사업 특수성, 난이도, 수행 가능성, 경제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은 수요 조사 후 교육지원청별 통합구매 추진
  - ※ 교육지원청별 수요조사 후 2단계 경쟁대상 금액 미만으로 통합계약 추진이 곤란한 경우, 도교육청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하면 도교육청 통합구매 추진

### ■ 물품구매 절차



## 9.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 ■ 관련 근거

- 「각급학교 물품 구매계약 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지방교육재정과-58, 2011.3.3.)
- 「각급학교 물품구매 계약관련 비리예방 제도개선 방안」(재무과-33, 2011.9.1.)
- 「각급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개선 알림」(재무과-17961, 2017.8.30.)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안내」(재무과-15988, 2023.7.14.)

### ■ 대상 기관

-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 ■ 적용 대상 금액

- 추정가격 1천만 원(1회 구매 총액) 이상 물품 구매
- 적용 제외 가능 대상
  - 공사용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관급자재선정위원회 기준 적용)
  -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학교장(기관장)이 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 ■ 위원회 역할

구분	금액기준별	계약방법	역할	비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천만 원 이상	3자 단가계약	제품 선정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일반물품) 5천만 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안요청)	제품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안공고)	규격 선정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학교장터 포함)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제품 선정	
	2천만 원 초과 ~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입찰	규격 선정	

## ■ 위원회 구성

###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회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생,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학교(기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 학교(기관)장, 계약부서의 장(교육지원청 과장, 행정실장 등) 제외
- 물품, 교구, 기자재 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 ■ 회의 운영 방법

- 회의 소집: 학교(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개최
- 회의 방법: 대면, 서면, 화상 회의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록은 전자문서에 등록하고 회의록은 지출결의서에 첨부

## ■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 학교(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정(평가) 기준 마련
- 규격 선정: 평가표 불필요(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회의록에 명시)
- 제품 선정: **3개 이상 제품에 대해 평가표(예시안)**를 활용하여 평가
  - ※ 단, 제품이 3개 미만인 경우는 회의록에 반드시 사유 명시
- 대상: 구매 **제품 단가 5백만원 이상** 또는 **제품별 구매총액이 1천만원 이상** 경우 평가표 작성
- 학교(기관)의 여건 또는 구매 품목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변경 및 평가 기준 항목 추가 가능
- 다만,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 구성 금지
-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제품의 적정성: 사용의 편리성, 사후 관리의 용이성, 제품의 내구성 등
  - 인증제품 등: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등
  - 약자지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제품 등
  - 지역업체: 본사가 지역업체(전북)인 경우 등
  - 가격: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 10.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나) 공사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 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 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90%)
-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시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2호, 2022.10.17. 시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 2023.2.1. 시행)

###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 ※ 주요제품: 건물청소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인쇄물, 가구, 운동복 등
  - 제품조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정보조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

구분	참가 자격	
금액기준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견적 수의계약</li> <li>• 중·소기업자(대기업 제외)</li> <li>•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의무없음</li> </ul>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견적 수의계약</li> <li>• 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중·소기업자로 제한</li> </ul>
	2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안내공고</li> <li>• 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추천 수의계약</li> <li>•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조합추천업체(소기업, 소상공인 5개 업체)와 지명방식 가격경쟁으로 진행</li> </ul>
	1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li> <li>• 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li> <li>• 중기간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실시</li> </ul>

## 1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시행)

###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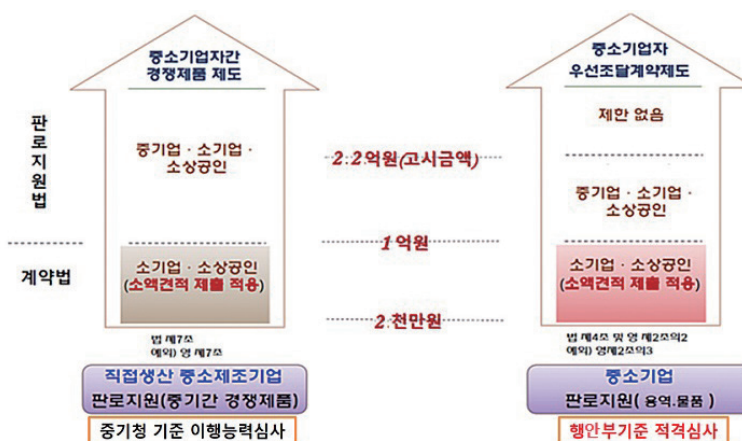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일정 금액 미만 물품·용역 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구분	참가 자격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견적 수의계약 (대기업 참여 가능)</li> </ul>
	2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안내공고</li> <li>•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li> <li>•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li> <li>• 적격심사 실시</li> </ul>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li> <li>•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li> <li>• 적격심사 실시</li> </ul>
	고시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li> <li>• 기업 제한없음</li> <li>• 적격심사 실시</li> </ul>

※ 〈중소기업자확인서〉 제출 시 자격 판단기준일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vs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계약방법



\* 판로지원법 적용기관 : 국가, 지자체, 특별법설립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고문 예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물품·용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관련 질의회신 내용:

관련 근거: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153(2020.2.13.)

### 01 질 의 내 용

귀 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2)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안내한 ‘학생 교복 단체구매 건과 같이 방과후학교 위탁용역’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02 회 신 내 용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취지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공급자가 1인뿐이라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액 등으로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용역을 조달하려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가능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2014년 7월에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각 교육청에 발송한 ‘**학생 교복 단체구매 건**’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복비를 학교 세입으로 하고 학교에서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세출하는 경우 등 학교 예산이 투입되고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당시 2.3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가 적용되지만, 교복비를 학교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에서 계약 대리업무만 할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 하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제2항에 따라 학교회계상 세입처리(과목: 기타수익자부담수입)하여 단위 학교에서 입찰공고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자유 수강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교복 구입비를 학교회계 상 세입 처리하고 있지만 수익자부담으로 충당된 수입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면 그 지출의 세입과목(수익자 부담수입, 지방교육세 등)과는 관계없이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며, 판로지원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교회계상 세입 처리된 수입으로 학교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용역이라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방과후학교 위탁용역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계약 체결 가능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13.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 ■ 관련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060호, 2015.10.12.제정)
- 「예산 집행 시 지역업체 적극 이용 및 지역 자재 우선구매 협조 요청」(재무과-11191, 2019.5.30.)
-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계획 안내 및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적극 협조 요청」(재무과-20193, 2021.10.29.)
- 「‘전북교육장터’ 구축 운영을 통한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추진 계획 안내 및 지역제품 구매 적극 협조 요청」(재무과-23753, 2022. 12. 13.)
- 「‘전북교육장터’ 구축 운영을 통한 2022년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점검 계획 안내 및 지역제품 구매 적극 협조 요청」(재무과-8765, 2023. 4. 11.)

### ■ 주요 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① 학교장터 연계 ‘전북교육장터’ 적극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학교장터 전북업체 코너 활용하여 ‘전북교육장터’구축</li> <li>②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학교장터 미등록업체 가입 홍보</li> </ul>
②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추진을 위한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쇼핑몰 구매 지양</li> <li>- 전북교육장터 및 나라장터 이용 시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li> <li>- 학습준비물은 인근 문구점, 도서는 동네서점 우선 이용</li> </ul> </li> <li>② ‘지역 우대 계약제도’ 지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경쟁 입찰 시 지역제한 입찰 적극 실시</li> <li>- 일반경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li> <li>-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적용 및 도내 생산 자재 우선구매</li> <li>-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배점 적용</li> </ul> </li> <li>③ 공공기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인식 전환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 대상 자체 전달교육 실시</li> <li>- 교육지원청 관내 기관 전달 교육 실시</li> <li>- 도교육청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li> </ul> </li> </ul>
③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율 분석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실적 취합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실적 취합</li> <li>-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실적 미흡기관 자체점검 및 지도</li> </ul> </li> <li>②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사례 공유 및 업무담당자 시상</li> </ul>

## 14.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 ■ 관련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5334호, 2023. 8. 11. 제정)
-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공포 알림」(재무과-17918, 2023. 8. 11.)

### ■ 조례 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로 한다.

1. 본청 및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표창)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5.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구매 이행

### ■ 공공구매제도 근거 법령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비고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중소기업 제품 - 총구매액(공사, 용역, 물품)의 50% 이상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의무
	여성기업 제품 - 물품: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구매 - 공사: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구매 - 용역: 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의무
	장애인기업 제품 - 총구매액(공사, 용역, 물품)의 1% 이상 구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	의무
	기술개발 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성능인증제품, NEP, NET, GS시험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혁신제품 등 13종) - 단, NEP(신제품인증)의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해당 제품이 있으면 20% 이상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의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40억 원 이상 종합공사(전문·전기·소방·통신공사 3억 원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부에서 공사용자재로 지정한 품목 중 4천만 원 이상인 자재는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의무
	창업기업 제품 - 총구매액(공사, 용역, 물품)의 8% 이상 구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8	의무
보 건 복 지 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 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의무
고 용 노 동 부	장애인표준 사업장 -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0.8% 이상 의무구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5	의무
	사회적기업 제품 -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3% 이상 권장 구매 (법정 구매 비율 없으나 적극 구매 권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권장
기 재 부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 법정 구매비율은 없으나 적극 구매 권장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권장
환 경 부	녹색제품 -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조건 없이 의무구매 (법정 구매비율은 없으나 적극 구매 권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무



## ■ 공공구매 구분 및 관련 사이트

### 1. 중소기업제품

- 기업 현황: 도내 총 10,556개, 전국 257,516개
- 관련 사이트: <https://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 2. 여성기업제품

- 기업 현황: 도내 총 2,817개, 전국 71,469개
- 관련 사이트: <https://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hopping.wbiz.or.kr>(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 3. 장애인기업제품

- 기업 현황: 도내 총 370개, 전국 8,076개
- 관련 사이트: <https://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 4.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중기부),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신제품(NEP, 산업부), GS시험인증(과기정통부), 신기술(NET, 산업부 등 9개부처), 우수조달공동상표(조달청), 물산업우수제품(환경부),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산업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산업부), 산업융합품목(산업부),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행안부) 총 13종
- 관련 사이트
  - <https://www.smpp.go.kr>(기술개발제품 조회)
  - <http://www.buynp.or.kr>(신제품인증 정보조회)
  - <https://www.swit.or.kr>(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인증정보 확인 등)
  - <https://www.netmark.or.kr>(신기술인증 정보조회)
  - <http://ppi.g2b.go.kr>(혁신장터)

### 5. 창업기업제품

- 기업 현황: 도내 총 1,308개, 전국 39,293개
- 관련 사이트: [cert.k-startup.go.kr](http://cert.k-startup.go.kr)(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6. 중증장애인생산물

- 기업 현황: 도내 총 33개소, 전국 767개
- 관련 사이트: <https://www.goods.go.kr>(꿈드래 쇼핑몰, 우선구매제도안내)

## 7.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표준사업장

- 도내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200), 사회적협동조합(142), 장애인표준사업장(25)
- 관련 사이트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 ▶ **취약계층 고용 비율 확인서 조회**
  - 장애인표준사업장: <https://www.withplus.or.kr>
  - 제품정보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조회: <https://www.sepp.or.kr>

## 8. 녹색제품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나라장터 쇼핑몰 확인, 구입)
- 관련사이트: <http://www.greenproduct.go.kr>(녹색제품 정보, 구매실적 확인)

### ■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도교육청 → 각 부처)

- 중소기업(여성, 장애인, 기술개발, 공사용 자재) 제품: **매년 1월 말까지**
- 중증장애인생산물: **매년 1월 말까지**
-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녹색제품: **매년 2월 말까지**
  - ※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는 제도별 최종 제출 기간 내에 작성 후 도교육청 제출

## V

## 계약 청렴도 제고

### ■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정 안내」(재무과-20159, 2022.10.18.)
- 「2023년 청렴계약 슬로건 선정 결과 안내 및 활용 요청」(재무과-17904, 2023.8.11.)

### ■ 청렴서약제 시행

#### • 청렴계약의 의의

-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에 대한 내용을 약정하게 하고,
-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

#### • 청렴서약서 제출

- **제출 시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 **입찰공고 시:** 청렴서약에 대한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  
※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 시 입찰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자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징구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명 날인 징구 또는 전자계약 시 **첨부**(전자서명으로 같음) 하여 계약 체결

#### • 선정된 청렴계약 슬로건 안내 및 활용

- 슬로건: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계약에 청렴을 더하고, 전북교육에 열정을 더하다”  
“계약의 부패를 방지하는 천연소금, 청렴”
- 슬로건 활용: 입찰 공고문, 공문 등에 게시

## 《공고문 명시, 예시》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000호

본 입찰(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공문 예시》

‘청렴 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라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알림 및 적용 요청

- 『1.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46(2023. 9. 26.)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개정(2023.6.29.)  
· 시행(2023.7.1.)을 하면서, 일부 개정사항\*은 나라장터(G2B) 시스템 개선 이후로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 적용 유예 개정사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금액 상향([별표 6] 3억 → 4억),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하한선 상향(60%→70%), 학술연구용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 등

※ 교육홍보문구 등록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기관관리자가 등록 또는 수정
- 서비스공통(조직및사용자)[업무]조직관리>조직관리에서 홍보문구 클릭하여 등록

## ■ 계약과정 및 계약정보 공개

- 공개 항목(7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 수의계약내역: 사업명, 계약개요,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사유, 사업장소 등
- 공개기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 공개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http://www.jb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 K-에듀파인과 연계하여 자동 공개  
 ※ 계약서·승낙사항 미작성 시 정보공개통합홈페이지에 자동연계되지 않으므로 K-에듀파인 입력 시 유의

## ■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 공개

구분	공개 방법	비고
각급 기관 (공립학교 포함)	• 전라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사립학교	• 상품권 구매 및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분기별 공개	
공동사항	• <u>상품권 구매·사용실적이 없을 시 공개 생략</u>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방법 변경 안내」 (재무과-23589, 2023.10.3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시행 2022. 10. 18.] [개정]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중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학교장 귀하

## VI 행정사항

### ■ 적용 기준일

- 공문시행일부터 시행

### ■ 경과 조치

-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계약은 본 지침을 적용
-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예규 및 관련 지침 적용



## VII 부록

### 1. 계약업무 처리지침 적용 관련 FAQ

본 질의응답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sup>8)</sup>이나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에 인용된 관련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현행법령을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기간의 계산방법은?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5일 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공고 게시일 + (공고기간) 7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단계입찰, 협상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추정가격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은 40일,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은 20일, 1억 원 미만은 10일, 긴급의 경우 10일 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되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공고 일수는 3일 이상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됩니다.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②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	재공고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시 공고절차를 정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를 다시 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li> </ul>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8)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입법적·사법적·행정적 해석





## 물품 제조·구매 계약 부적정 - 특정업체 지정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항, 「조달청 종합 민원센터 계약법규질의 사례」

**(업무기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성립되는 공개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을 부치지 않아야 함.

### ■ 감사 지적 사례

○○지원청은 ‘수상안전용품(구명조끼)’을 2인 이상 공개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수의공개견적)으로 진행하면서 안내 공고문에 특정 수영용품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구명조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델명(ATA121)등 2건을 특정하여 공고하였음.

○○고등학교는 학생용 컴퓨터(계약금액 35,616천원) 및 업무용 컴퓨터 구매(계약금액 40,488천원)를 공개수의견적(s2b)으로 집행하면서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였고, 예정가격을 조사하지 아니 하였으며,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안내 공고문에 특정 업체의 모델명을 특정하여 공고함.



## 지방계약법 관련 수의 견적서 제출 무효 여부

### ■ 질의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전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5)”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해당 견적서를 제출자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 관련 입찰 무효 해당 여부

### ■ 질의요지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 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 무효인지 여부(수익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답변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한편, 같은 집행기준 제5장 수익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 15)”에 따르면 수익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하고,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업체 해당 여부는 입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 변경 시점에 관하여는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공사나 용역도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이 있거나 기간을 두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 등 계약상대자와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증금 지급 확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15조,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지방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규칙 제70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여 승낙사항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물품 구매시 검사조서를 생략해도 되나요?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17조,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 **감사 지적 사례**  
(공사) ○○○○학교는 2018. 12. 31. 계약한 '학급증설 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계약금액: 54,044천원) 외 4건(총 계약금액: 318,027천원)에 대하여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용역) ○○○○○학교는 2017 ~ 2019학년도 학생수송 통학버스 임차용역 3건  
(총 계약금액: 131,141천원)에 대하여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 지급
- 지방계약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 설계서 및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사(檢査):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규격서·시방서등)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고, 검수(檢收)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에 손상이 없고 계약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 감사원 발간)**



## 변경계약 업무 소홀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업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함.

**(업무기준)**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발주기관의 계획 지연 포함)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또한, 계약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 감사 지적 사례

○○기관은 ‘식생활관 급식기구 구입 및 설치’를 집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사정(급식기구 배치 등)으로 급식기구의 납품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계약서의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인 2016. 6. 30.부터 22일이 경과한 2016. 7. 22.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에 물품을 납품 받았음.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 10%와 경제적 이익 5%를 통합해서 할인받을수 있는지?

- 관련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6항 신설
- 제22조 제5항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제22조 제6항 2021. 8. 10. 신설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경제상 이익을 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도서정가제 질의응답 사례 - 납품 입찰에서 MARC, 바코드 등의 비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 경제상의 이익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는 바 거래대상 간행물의 MARC 작업, 장비용역 또는 저자강연회 지원 등이 가능한지 여부(제22조제8항제5호 관련)
- 경제상의 이익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판매자가 독서진흥과 도서 소비촉진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대상 간행물의 MARC 작업, 장비용역 또는 저자강연회 지원 등은 도서관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경제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음.



## 2단계 입찰 운영 소홀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업무기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의 용역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 주된 영업소가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되 다른 제한사항과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됨.

### ■ 감사 지적 사례

○○고등학교 1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과 졸업앨범 계약을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전라북도)과 실적제한(최근 3년 동안(이내)실적 있는 업체)으로 중복제한 하였고,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10일 이상 주어야 하나 7~9일만 공고하였으며,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음.

○○고등학교는 1·2학년 취업마인드 향상과정 연수 용역 계약을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고 하고 △△외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계약관련 공무원을 평가위원에 포함하였고 평가위원 2명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 업체는 모두 가격개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고문에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우선순위 2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여 입찰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음.



## 2단계 입찰 운영 소홀

### ■ 감사 지적 사례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을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10일 이상 주어야 하나 2~6일만 공고하였고, 입찰 및 공개견적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면서 1개 업체 견적금액으로 기초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기초금액 결정방법에 대한 경리관 결재 없이 기초금액을 결정하는 등 기초금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

○○학교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1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10일 이상)을 주어야 하나 7일만 공고하였고, 정량(객관)적 평가 대상인 ‘차량연식’항목을 정성(주관)적 평가에 배치하고 그 배점 또한 정성평가(60점 만점)의 1/3인 20점으로 과다 배점함으로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낳았음. 또한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 상호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서류 배부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지 않았음.



## 수학여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 간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교와 별도 구분 계약없이 전체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 숙박비 등 모두 포함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학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항공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여행사는 당해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학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동 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 ■ 국세청 답변 자료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2384, 2004.11.25.)(부가 46015-1296, 2000.6.2.)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문서'의 의미와 과세 대상은?

-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서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음.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함.
- 여기에서 '일의 완성'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건물의 건축·선박의 건조·가구의 수선과 같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운송·병의 치료·소송사건의 처리·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세무사의 기장대리·음악의 연주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결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 생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중물품의 단순 구매, 학교급식납품 계약(우유급식 포함)은 매매계약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1인 수의계약 집행 가능 대상 한도는?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 수의계약 유형: 2인 이상 견적제출, 1인 견적 제출 가능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금액기준(추정가격):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 등 그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1억원 이하
  - 견적서 제출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통해 견적서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개정(2023.1.1. 시행)
-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특례 연장 교육부장관이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내용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특례 연장(재무과-14740, 2023.7.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적용기간: 2023. 12. 31.까지
  - 시행령 제26조 제2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5항: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내게 해야 한다.
  - 시행령 제64조(검사) 제1항: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시행령 제67조 제1항: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교육부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2023. 12. 31.까지(재무과-15168, 2023.7.6.)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23.12.31.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공사 적격 심사	재무비율 평가	(기존) 최근연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 (특례)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	'23.12.31. (입찰 공고일 기준)



## 2023. 7월 개정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관련

###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 – 대상

- 학교: 공립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도 대상인가요? 공·사립 학교 모두 대상임

#### – 대상 금액: 추정가격 1천만 원(1회 구매 총액) 이상 물품 구매

- 제외 가능 대상: 공사용 관급자재, 소모품, 천재지변/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장(기관장)이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물품 선정시 제품 선정 평가표 작성

#### – 대상: 제품 단가 5백만원 이상 또는 제품별 구매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 – 작성: 제품별 상황에 맞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

- 예시안은 조달등록 제품을 구매할 때 G2B에서 제공되는 정보 활용 가능

#### – (예제) oo초등학교에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 제품 평가표 작성 대상은?

제품	수량	단가	금액	제품 선정 평가표 작성대상
전자칠판	1	5,600,000	5,600,000	○
실험대(160*70, 4인용)	10	500,000	5,000,000	×
실험대(270*70, 6인용)	10	1,200,000	12,000,000	○
학생용 의자	30	200,000	6,000,000	×
전자현미경	1	4,500,000	4,500,000	×
계			33,100,000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기준 및 구매예산액은?

- 조달청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물품별 금액 모두 포함해야 함)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 1억원 이상(선택)
  - ‘설치비’는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

### ■ 조달청 구매방법 및 계약방법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세부품명 :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

규격 : 교육용소프트웨어, 인터랙, 아이어스v1.0, 전산화인지재활솔루션, 치료교육

식별번호 : 23304293

회사명 : 주식회사 인터랙 [중소기업]

원산지 : 대한민국

계약종료일 : 2024/06/06 | 납품기한 : 6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현장설치도 | 전지역

우선(의무)구매대상 :

3자단가계약

32,000,000 원

식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세부품명 :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0)

규격 : 데스크톱컴퓨터, 트리엠, iAN E9X 2180 13, AMD RYZEN5 5600X(3.7GHz)

식별번호 : 24467536

회사명 : 주식회사 트리엠 [중소기업]

원산지 : 대한민국

계약종료일 : 2024/12/31 | 납품기한 :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납품장소도 | 전지역

우선(의무)구매대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

992,500 원

대

추가선택(운반설치,부품등)

세부품명 : 액정모니터(4321190200)

규격 : 액정모니터, (주문자상표부착)리퓨터, (CN)P24M4-ES, 60.4cm

식별번호 : 24683904

회사명 : 주식회사 리퓨터 [중소기업]

원산지 : 중국

계약종료일 : 2025/09/15 | 납품기한 :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현장설치도 | 전지역

우선(의무)구매대상 :

제조

다수공급자계약

240,000 원

대

세부품명 : 방화벽장치(4322250100)

규격 : 방화벽장치 넥스지 Wforce UTM 50,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식별번호 : 23445641

회사명 : 주식회사 넥트웍스 [중소기업]

원산지 : 대한민국

계약종료일 : 2024/04/02 | 납품기한 :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현장설치도 | 전지역

우선(의무)구매대상 : 해당 없음

공급

다수공급자계약

1,210,000 원

대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 해당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액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시에 예산액을 입력해야 하며 나라장터 계약단가와 확보된 예산을 고려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음
- 제안공고에 있는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는 제안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 입력시에 업체의 가격 할인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규격뿐만 아니라 예산액 규모로 업체 제안서 제출 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례) ○○초등학교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할 경우

- 사업비: 130,000천원
- 사업비 내역: 공사비 20,000천원, 물품 구매: 110,000천원
- 물품 구매 품목 분류: ① 조달 구매(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② 입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 ③ 1인 수의계약 품목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 구매 품목 분류: 2개 업체 이상 경쟁이 가능 여부 확인
- 한꺼번에 경쟁할 수 있는 제품별로 분류: 전자제품(TV, 냉장고 등), 가구류,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구분	1회 구매 대상 예산액	2단계 경쟁 대상 여부	비고
중기간 경쟁 대상	1억 2천만원	○	
중기간 경쟁 비대상	4천만원	×	
중소기업 제조 물품	6천만원	× 또는 ○	선택
중기간 경쟁 대상 제품과 대기업 제품 통합구매시	중기간(4천만원) +대기업(4천만원)	○	기준 금액이 낮은 경우 적용 (합산금액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단계 경쟁 대상임)
	중기간(6천만원) +대기업(3천만원)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7.1.시행) 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7항 신설 참고

- 구매 희망 규격 내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면서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 (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 그 외의 경우: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 용역계약에서의 사후정산의 요건 및 부당한 사후정산 사례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조달청지침, 2022.12.26. 시행)
- 확정계약인 경우 입찰공고에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과 사후정산항목을 공개한 경우 정산 가능
  - ※ 단, 해당 계약건의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여부를 검토한 후 사후정산 가능 여부 판단
- 사후정산항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단순노무 용역에 한함)
- 부당한 사후정산 사례
  - － 과업수행업체는 행사 종료 후 행사비용 증빙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받고 정산 후 미사용 금액은 발주처에 반환하며 정산범위는 계약금액으로 함
  - －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자는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금액을 실비 정산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용역사업의 대가 지급은 사후정산하여 지급하며, 최종 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2주 이내 실비정산(완료보고 포함)하여 잔금 지급
  - － 입찰 후 정산조건 적용 요구
    - 입찰 전 입찰공고 등에서 정산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기술 협상과정에서 사후정산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 계약자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여 요구 수용
    - 확정된 과업의 이행과정에서 사용한 물품을 검사·검수하고 대금지급까지 완료한 후 인터넷 최저가금액 또는 실제 구매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
  -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후정산 특수조건부 계약 포함)은 입찰 전에 적용대상,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부당한 이윤 및 일반관리비율 조정
    - 사전에 확정 가능한 과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또는 낙찰자 선정 시점에서 과업을 추가 반영하면서 해당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비용 만큼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감액하여 산출내역서 수정 요구.
    - ▶ 발주기관이 추가 과업 요구시 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2. 2022. 1. 이후 개정된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순	구분	시행일	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3. 7. 12.	59~6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61~67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7.	68~71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3.	72~75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3. 1. 1.	76~77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3. 7. 1.	78~80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3. 1. 1.	81~84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3. 7. 1.	85~87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2023. 2. 1.	88~119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022. 10. 17.	120~125
1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2023. 7. 1.	126~146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2022. 12. 26.	147~155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	156~161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2. 2. 11.	162~16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2.]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6조(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
- 제13조(낙찰자 결정)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
- 제34조(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p>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생 략)</p> <p>〈신 설〉</p>	<p>제6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p><b>제13조(낙찰자 결정)</b> ① ~ ③ (생 략) 〈신 설〉</p>	<p><b>제13조(낙찰자 결정)</b>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p>
<p><b>제34조(이의신청)</b>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p> <p>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p> <p>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신 설〉</p> <p>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34조(이의신청)</b>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p> <p>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p> <p>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p> <p>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4조(국제입찰에 관한 계약)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 제18조(2단계 입찰) 규격입찰·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 제3항에 따른다.
- 제5조(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 ▣ 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p><b>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b>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② (생 략)</p>	<p><b>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b>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b>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b></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8조(2단계 입찰)</b> ① ~ ③ (생 략)</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b>제18조(2단계 입찰)</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b>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위원회를 둔다.</b></p> <p>⑤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p> <p>⑥ <b>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b></p>
<p><b>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p> <p>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b>2억원</b>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b>1억원</b>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b>8천만원</b>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p> <p>나. (생 략)</p>	<p><b>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p> <p>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b>4억원</b>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b>2억원</b>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b>1억6천만원</b>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p> <p>나. (현행과 같음)</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p>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b>5천만원</b>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p> <p>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b>5천만원</b>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p> <p>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b>5천만원</b>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바. (생 략)</p> <p>6. ~ 7의2. (생 략)</p> <p>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p> <p>가.·나. (생 략)</p> <p>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b>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b>을 구매하려는 경우</p> <p>라. ~ 차. (생 략)</p> <p>② (생 략)</p>	<p>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b>1억원</b>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p> <p>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b>1억원</b>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p> <p>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b>1억원</b>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바. (현행과 같음)</p> <p>6. ~ 7의2. (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b>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b></p> <p>라. ~ 차.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p>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li> <li>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li> <li>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li> <li>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li> <li>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li> <li>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li> <li>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li> <li>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li> <li>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li> </ol> </li> </ol>	<p>〈삭 제〉</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p><b>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생 략)</b></p> <p>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b>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p><b>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b>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p> <p>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p> <p>2. 3. (생 략)</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 ⑤ (생 략)</p>	<p><b>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b>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p> <p>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b>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12. (생 략)</p> <p>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p>	<p><b>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b>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p><b>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b>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b>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b></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b>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b></p> <p>③·④ (생 략)</p>	<p><b>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b>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b>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b></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b>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b> 제출하게 할 수 있다. <b>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b></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② (생 략)</b></p> <p>③ <b>제39조제2항</b>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p>	<p><b>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b>제39조제1항</b>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p>
<p><b>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b></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b>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b>〈후단 신설〉</b></p> <p>〈신 설〉</p> <p>〈신 설〉</p>	<p><b>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시·도지사가</b>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b>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b></p> <p>⑤ <b>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b></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p><b>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⑥ (생 략)</b></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p> <p>⑧ ~ ⑬ (생 략)</p>	<p><b>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⑥ (현행과 같음)</b></p> <p><b>&lt;삭 제&gt;</b></p> <p>⑧ ~ ⑬ (현행과 같음)</p>
<p><b>제88조(공동계약) ① ~ ④ (생 략)</b></p> <p>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p> <p>⑥·⑦ (생 략)</p>	<p><b>제88조(공동계약) ① ~ ④ (현행과 같음)</b></p> <p>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b>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 략)</b></p> <p>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p> <p>나. (생 략)</p> <p>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p> <p>라. ~ 사. (생 략)</p> <p>2. 3. (생 략)</p> <p>③ ~ ⑮ (생 략)</p>	<p><b>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b></p> <p>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p> <p>나.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p>라. ~ 사. (현행과 같음)</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 ⑮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3. 3. 7.][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
-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관리·사용하고 있는 기성·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5호아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p><b>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b>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15. (생 략)</p> <p>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b>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b>에 관한 사항</p> <p>17. ~ 21. (생 략)</p>	<p><b>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b>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b>그 장소 및 일시</b>에 관한 사항</p> <p>17. ~ 21. (현행과 같음)</p>
<p><b>제37조(입찰보증금)</b> ①·② (생 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 사. (생 략)</p> <p>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 ~ 파. (생 략)</p> <p>〈신 설〉</p> <p>6. ~ 7. (생 략)</p> <p>④ (생 략)</p>	<p><b>제37조(입찰보증금)</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p> <p>자. ~ 파. (현행과 같음)</p> <p>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p> <p>6. ~ 7.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p>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p> <p>2. (생략)</p> <p>② ~ ⑧ (생략)</p>	<p>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b>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 ④ (생략)</p> <p>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p>	<p><b>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b>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해야 한다.</b></p> <p>1. <b>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b></p> <p>2. <b>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b></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p><b>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②</b> (생 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 ⑨ (생 략)</p> <p>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신 설〉</p> <p>〈신 설〉</p> <p>⑪ ~ ⑮ (생 략)</p>	<p><b>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마목·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li> <li>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li> </ol> <p>⑪ ~ ⑮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新旧법 비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 1. 1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p>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 <p>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p> <p>2. 3. (생략)</p>	<p>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 <p>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p> <p>2. 3. (현행과 같음)</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 1. 1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p><b>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②</b>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p>	<p><b>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p>
<p><b>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b>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p> <p>②·③ (생략)</p>	<p><b>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b>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b>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p> <p>1. (생략)</p> <p>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p> <p>〈신설〉</p> <p>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p>	<p><b>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b>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3천만원.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p> <p>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p> <p>나. 가목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 1. 1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p><b>제 42 조 (입찰무효)</b> 영 제 39 조 제 4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 략)</p> <p><b>10. 영 제 43 조 제 6 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b></p> <p>11. ~ 13. (생 략)</p>	<p><b>제 42 조 (입찰무효)</b> 영 제 39 조 제 4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p>11. ~ 13. (현행과 같음)</p>
<p><b>제 55 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b>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1 조 제 4 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b>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 13 호 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b>제 55 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b>주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3 조 제 1 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b>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 13 호 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 86 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b>공사발주</b>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1. 자재의 품질, <b>수급사항</b>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p> <p>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b>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b></p> <p>② (생 략)</p>	<p><b>제 86 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b>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p> <p>1. 자재의 품질, <b>수급사항, 공사규모</b>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p> <p>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b>인증제품인 경우</b></p> <p>② (현행과 같음)</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 1. 1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p><b>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b>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b>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b>」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b>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b>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b>소프트웨어 진흥법</b>」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 전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업체 부담 완화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 공기업·출연기관 및 국·시·도비 보조사업 등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하도록 개선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 제외·회피 규정 신설
-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규정 완화
-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지정하던 것을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
-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 회피를 위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 신설
-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등

### ▣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신설



구분	내용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p>5. 선금의 사용과 정산</p> <p>가. 선금지급조건</p> <p>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p> <p>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적정히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선금 전액 사용 시 사용 내역 제출 의무사항 완화</p>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p>4. 정산 관련 사항</p> <p>나. 정산범위</p> <p>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를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p> <p>5. 기타</p> <p>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신설</p>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p>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p> <p>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문 신설 (‘22.9.20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제9장 계약 일반조건	<p>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p> <p>⇒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통합</p>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3.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 ▣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칙	<p>3.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p> <p>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 32) (현행과 같음)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p>	신설

구분	내용	비고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p><b>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b></p> <p>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lt;별표 1&gt;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p>	<p>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방식 개선 2023.9.1. 시행</p>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p><b>1. 계약의 기본원칙</b></p> <p>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p> <p>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중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p> <p>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p> <p>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p> <p>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p> <p>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p> <p>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p>	<p>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발주기관 공정 계약 서약제 도입</p>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계약의 체결	<p><b>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b></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일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기업부담 완화)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 개선</p>

구분	내용	비고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p><b>4. 계약보증금의 처리</b></p> <p>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b>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b></p> <p>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p> <p>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p>	시행령 개정 (’23.3.7) 사항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전부개정]

### ■ 개정이유

- 업체 부담 완화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 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 시 비영리·영리단체 간 평가 기준 단일화
-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직접시공 활성화 관련 규정 신설
- 학술연구용역 평가 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 공사이행의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행능력 상 결격여부 평가' 도입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등 신설

### ■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 항목별 심사요령	<p>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p> <p>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p> <p>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을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p> <p>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p> <p>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p>	신설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p>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감점기준 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분야</th><th>평 가 방 법</th><th>배점</th></tr> </thead> <tbody> <tr> <td>④ 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td><td>○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td><td>-15</td></tr> </tbody> </table>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④ 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감점 기준 마련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④ 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칙	<p>1. 목적</p> <p>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조문 정리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절 평가기준	<p>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p> <p>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p> <p>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p>	신설						

구분	내용	비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p>1. ~ 4. 동일</p> <p>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p>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p> <p>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p> <p>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p> <p>(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p> <p>(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p> <p>(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p> <p>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적격심사 통합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p>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1〉</p> <p>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2〉</p> <p>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3〉</p> <p>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4〉</p> <p>2.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p>	기술·학술 연구용역 통합을 위한 조문 정리



구분	내용	비고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p>1. 위원회 구성 가. ~ 마. 동일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p> <p>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차”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lt;별지 제2호 서식&gt;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lt;별지 제2호 서식&gt;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p> <p>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p> <p>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p> <p>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p> <p>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4. 사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p> <p>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p>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3.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 6. 29.,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 학술연구용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

### ■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 (2억→4억) 2023.10.1. 시행																												
	<table><tr><th>평가요소</th><th colspan="3">점 수 배 점</th><th>비고</th></tr><tr><td rowspan="6">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td><td colspan="3">○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td><td rowspan="6">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td></tr><tr><td>구분</td><td>종합공사</td><td>전문 . 그 밖에 공사</td></tr><tr><td>100%이상</td><td>4.8점</td><td>5.0점</td></tr><tr><td>70%이상100%미만</td><td>4.3점</td><td>4.5점</td></tr><tr><td>40%이상 70%미만</td><td>3.8점</td><td>4.0점</td></tr><tr><td>20%이상 40%미만</td><td>3.3점</td><td>3.5점</td></tr><tr><td>20%미만</td><td>2.8점</td><td>3.0점</td></tr></table>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이상	4.8점	5.0점	70%이상100%미만	4.3점	4.5점	40%이상 70%미만	3.8점	4.0점	20%이상 40%미만	3.3점	3.5점	20%미만	2.8점	3.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이상		4.8점	5.0점																											
70%이상100%미만		4.3점	4.5점																											
40%이상 70%미만		3.8점	4.0점																											
20%이상 40%미만		3.3점	3.5점																											
20%미만	2.8점	3.0점																												

구분	내용	비고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 (2억→4억) 2023.10.1. 시행																																																										
	<table><tr><td>평가요소</td><td colspan="5">점 수 배 점</td><td>비고</td></tr><tr><td colspan="6">○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td></tr><tr><td colspan="6">○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td></tr><tr><td colspan="6">○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td></tr><tr><td colspan="6">○ <b>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b> (단위: 점)</td></tr><tr><td colspan="2">구 분</td><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E등급</td></tr><tr><td rowspan="2">평가 비율</td><td>실적인정기간 4년이상</td><td>60% 이상</td><td>50% 이상</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30% 미만</td></tr><tr><td>실적인정기간 4년미만</td><td>50% 이상</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20% 이상</td><td>20% 미만</td></tr><tr><td colspan="2">점 수</td><td>4.8</td><td>3.8</td><td>2.8</td><td>1.8</td><td>0.8</td></tr></table>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b>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b>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b>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b>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b>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b>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영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영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영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 2023.10.1. 시행
3. 신인도 (+3점 ~ -3점) 주1)~주3) (현행과 같음)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구분	내용	비고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p>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b>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b></p> <p>주1) (현행과 같음)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b>70%상당가격</b>)]</p> <p>※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b>70미만일</b>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b>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b>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p> <p>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b>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b>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p>	<p><b>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  (60%→70%,  안전관련 제품  60%→80%)  2023.10.1. 시행</b></p>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시행 2023. 2.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 2023. 2. 1., 폐지제정.]

### ■ 개정이유

- 2022 ~ 20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고시('22.4.1.) 이후 경쟁제품 변경사항과 소기업 제한경쟁 대상제품 지정 내역 등 반영 필요
- 부칙 제5호에 따라 직접생산중소기업수가 10개 미만인 '비대면방역감지장비'를 삭제하고, 규정의 실익 없어진 부칙 제5호도 삭제
- 조달청「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품, 세부품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현행화
- 제품명 및 특이사항의 오탈자 정정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고시

### ■ 개정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10	산동식물 및 동식물 성생산물	101716	무기질비료 및 식물영양제	1017161101	석회비료		
				1017169401	규산비료	공공조달시장의 6% 이내에서 예외	
11	광물, 식물 및 비식용 동식물자원	111015	광물	1110152201	활성탄	석탄계 입상활성탄 및 석유 화학계활성탄 제외	
		111116	석재	1111160401	화강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문화재 수리용 화강석은 제외	○
				1111160801	석회석		
				1111169701	잡석		○
				1111169801	조경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문화재 수리용 조경석은 제외	○
		111220	성형목재 제품	1112200601	방부목		○
		111616	모직물	1116160101	소모직물	울100% 소모직물은 제외	
		111618	합섬직물	1116180101	폴리에스테르직물	폴리에스테르 함유량 85% 이상에 한함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13	수지, 고무, 탄성중합체	131112	필름	1311120101	폴리에틸렌필름	농업용필름(Po필름, 초산비닐함량 13%이내의 EVA필름) 포함	○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141115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1411150601	전산디자인		
				1411150701	프린트및복사용지		
				1411151101	중질지		
				1411151401	수첩		
				1411151402	공책		
		141116	혁신용지	1411160501	엽서		
		141117	일반종이 제품	1411170401	화장실용화장지		
		141118	업무용지	1411180101	표		
				1411180606	명세서		
				1411189901	일반행정공통서식		
21	농, 수, 임, 축산용 기계	211015	토지관리 농기계	2110150101	쟁기		
				2110150201	쇄토기		
				2110150601	정지기		
		211017	수확용 농업기계	2110170301	땅속작물수확기		
				2110170601	목재파쇄기		
				2110171001	수확용건조기		
		211018	농업용분사 및 분무장치	2110180101	동력분무기	배부식(등에 매는 형식) 또는 견착식(어깨에 매는 형식) 제품은 제외	
				2110180401	비료살포기		
				2110180601	퇴비살포기		
				2110189901	농축산용방역장비		
		211019	축산용기기	2110190401	사료배합기		
		211020	농업용 세정분류 및 선별기	2110209801	선과기		
23	산업용제조 가공기계 및 액세서리	231531	산업용 기계부품 및 액세서리	2315313001	진동방지장치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23	산업용제조 가공기계 및 액세서리	231815	음식물 준비기	2318150601	세미기		
				2318150602	자동야채세척기	농산물 세척기에 한함	
				2318150603	과일세정살균기	농산물 세척기에 한함	
		231819	음식물 처리기류	2318199801	산업용음식물 쓰레기처리기		○
				2318199802	일반용음식물 쓰레기처리기		○
		232615	쾌속조형기	2326150701	3차원프린터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의 점유율 관리 방안에 따라 50% 이내에서 예외 적용 가능 2. 총액계약 체결시 FDM방식제품은 매액의 50% 이내에서 예외를 적용하며, 다른방식 제품은 적용 제외	
		239905	청정실환경 조절장비	2399059901	소음기		○
24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액세서리 및 소모품	241016	리프트장비 및 액세서리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1.속도분속 105M이하에 한함. 2.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 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은적용 제외	○
				2410160102	화물용엘리베이터		○
				2410160201	전동식와이어 로프호이스트		○
				2410164201	기중기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410165201	지브크레인		○
				2410165301	천장크레인		○
				2410167601	가동보	고무 소재의 제품은 제외	○
				241016820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2410168501	수문권양기	인양능력 1ton 초과 제품에 한함	○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
				2410168903	차량인식기		○
				2410168906	주차안내판		○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24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액세서리 및 소모품	241016	리프트장비 및 액세서리	2410168909	차량차단기		○
				2410169601	휠체어리프트		○
		241017	컨베이어 및 액세서리	2410171201	벨트컨베이어		○
				2410171401	에어컨베이어		○
				2410172201	체인컨베이어		○
				2410173001	스크루컨베이어		○
		241022	포장도구	2410229801	재활용품압축기		○
		241115	자루	2411150201	종이포대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		
				2411150303	폴리에틸렌포대		
				2411150501	벌크컨테이너백		
		241118	탱크 및 원통형 저장소	2411180501	약품탱크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
				2411181001	물탱크		○
				2411181002	빗물저장탱크	스테인레스 또는 폴리에틸렌더블프레임(PDF) 소재의 제품에 한함	○
				2411189701	온수탱크	스테인레스 소재의 제품에 한함	○
		241124	저장용기, 캐비닛 및 트렁크	2411240403	플라스틱상자		
		241125	유통용골판 및 기타용품	2411250101	골판지상자		
		241127	팔릿	2411270201	플라스틱팔릿		
		241220	병	2412200201	플라스틱병		
		241315	산업용 냉장기	2413150301	대형냉장고		○
25	상용, 군용, 개인용 운송기구 및 액세서리와 부품	251017	안전 및 소방차량	2510178901	소방펌프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251115	상선	2511150201	어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25	상용, 군용, 개인용 운송기구 및 액세서리와 부품	251115	상선	2511150601	예인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50701	바지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50801	자동차도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50802	여객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52701	소형보트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59701	기동정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6	안전 및 구조용선박	2511160201	소방선	1등급 제품 예외(소방청자체기준)	
				2511160301	구조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7	군용선박	2511171801	순시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72201	경비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72601	오염관리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18	휴양용선박	2511180801	요트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20	특수선박	2511200401	세관감시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200701	어업실습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200801	어업조사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200901	어업지도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201201	청소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511201401	해양조사선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25	상용, 군용, 개인용 운송기구 및 액세서리와 부품	251318	특수항공기	2513189901	드론	1. 고정익, 군사용, 수소드론 제외 2. 자체중량 25kg이하 또는 운용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한함	
		252503	신호제어 및 보안설비	2525032501	열차행선안내장치		○
26	회전기기 및 경전기	261116	발전기류	2611160101	디젤발전기	1. 발전용량 2,000KW 이하에 한함 2. 해상용 디젤발전기는 제외	○
				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	1. 발전용량 1,000KW 이하에 한함 2. 수상용 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는 제외	○
		261117	배터리, 전지 및 보조용품	2611170401	산업용충전장치	송변전용(송전 설비 및 배전설비의 기기제어 전원용에 사용하는 충전장치) 또는 통신용(통신설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충전장치)에 한함	○
		261215	전력선	2612152202	전기용연동연선		○
				2612152204	전기용경동연선		○
				2612152404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비닐 절연전선		○
				2612152412	옥외용비닐 절연전선		○
30	건자재	301029	기둥	3010290301	금속기둥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금속기둥에 한함	○
		301032	그레이팅	3010320101	스틸그레이팅		○
		301036	목재건자재	3010360501	목재판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 재수리용 제외	○
				3010362201	각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 재수리용 제외	○
				3010369901	합성목재		○
		301099	골재	3010990201	혼합골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30	건자재	301099	골재	3010990401	순환골재	순환골재 제품제조용(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및 「건설폐기물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생산한 순환골재는 제외	○
		30111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3011150501	레미콘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
				3011159201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
				3011159202	순환상온아스팔 트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
				3011159301	콘크리트기초		○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
		301118	콘크리트 보강철물	3011180101	용접철망		○
		301216	아스팔트류	3012169501	주철맨홀뚜껑		○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유리섬유복합판맨홀은 제외	○
				3012169902	플라스틱계맨홀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1217	도로 및 철도건설 자재	3012170201	직포매트		
				3012170202	토목용부직포	필라멘트(생사의 섬유나 절단하지 않고 방사한 화학섬유에서 얻은 장섬유)로 만들어진 토목용 부직포는 제외	○
				3012170206	보행매트		○
				3012170208	식생매트		○
				3012170301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
				3012170302	철제교량난간		○
				3012171501	교량이음장치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30	건자재	301217	도로 및 철도건설 자재	3012171601	교량받침		○
				3012178601	차수매트		○
				3012178702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12178801	낙석방지책		○
				3012178901	철제도로 중앙분리대		○
				3012179301	철제가드레일		○
				3012179401	볼라드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1218	조경용재	3012189801	수목보호용지지대	목재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1315	블록	3013150201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
				3013150202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
				3013150204	속빈콘크리트블록		○
				3013150206	소파블록		○
				3013150209	콘크리트경계블록		○
				3013150301	자연석경계석		○
				3013151401	조립식철근 콘크리트암거블록		○
				3013159201	안전유도블록	콘크리트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13159801	조립식철근 콘크리트저류블록		○
		301316	벽돌	3013160201	점토바닥벽돌		○
				3013160202	미장벽돌		○
				3013160301	콘크리트벽돌		○
		301317	타일 및 판석	3013170201	자연석판석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3170401	도기질타일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 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30	건자재	301317	타일 및 판석	3013170402	자기질타일	1. 수영장타일 중 기능성타일 (손잡이타일, 골타일, 수조벽트렌치타일, 트린치앵글타일 등), 폴리싱타일 및 석재타일 제외 2.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3170403	그림타일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3170405	모자이크타일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3170408	부조타일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515	지붕재료	3015159001	그을림한식기와		○
		301518	외벽용재료	3015180201	샌드위치패널		○
				3015180209	금속제패널		○
				3015189901	합성고분자 방수시트		○
		301519	마무리재료 및 제품	3015190101	차양		○
		301520	울타리재료 및 제품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
				3015200103	YL형울타리		○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
		301522	외부바닥 재료	3015229901	목재덱		○
		301617	바닥재	3016170201	플로어링보드	1. 강화마루제품 제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30	건자재	301715	문	3017150401	목제문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716	창문	3017169501	합성수지제창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7169601	목제창		○
				3017169801	금속제창	1. 알루미늄제에 한함 2. 20층이상 건물에 시공하는 커튼월은 제외	○
		301799	문틀	3017999701	합성수지제문틀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7999801	목제문틀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301815	위생도기	3018150801	화장실칸막이		○
		302017	상업 및 산업용 조립건물	3020170401	청정실		○
				3020170501	이동식초소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20170502	흡연부스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20170503	기타이동식부스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20179601	조립식구조물	1.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2. 지붕구조물이 있는 제품에 한함	○
		302210	상업 및 오락용건물	3022109901	무대장치		○
		302220	운송건물	3022200301	버스승강장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22201701	잔교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3022206401	자전거보관대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022209701	해상부유구조물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제품에 한함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30	건자재	302316	이동식상용 및 산업용 조립구조물	3023160202	기타이동식화장실		○
				3023169901	컨테이너하우스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1	제조부품	311515	로프	3115151201	폴리에틸렌로프		
				3115150301	폴리프로필렌로프		
				3115150401	나일론로프		
		311632	고정장치	3116329901	압륜		○
		311634	금속망	3116340301	금속돌망태		○
		312115	페인트 및 전처리제	3121150101	에나멜페인트		○
				3121151301	노면표지용페인트	KS M 6080 5종(상온경화형플라스틱도료) 제외	○
				3121159901	특수페인트		○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	391016	각종등	3910161401	메탈할라이드램프		○
				3910169901	LED램프		○
		391115	옥내조명 및 설비	3911150101	매입형형광등기구		○
				3911150102	천장직부형 형광등기구		○
				3911150103	매달림형 형광등기구		○
				3911151501	다운라이트		○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
				3911152602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91116	옥외조명 및 설비	3911160301	가로등기구		○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	391116	옥외조명 및 설비	3911160601	LED수중조명등		○
				3911160801	보안등기구		○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
				3911161101	투광등기구		○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
				3911161103	탐조등		○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
		391117	비상용조명	3911170801	유도등		○
		391118	조명용 액세서리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
				3911180102	나트륨 램프용안정기		○
		391120	이동식 및 임시용조명 및 액세서리	3911200101	조명타워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
		391121	광학조명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
		391210	동력 조절장비	3912100101	몰드변압기	3,000KVA 이하에 한함	○
				3912100102	건식변압기		○
				3912100104	유입변압기		○
				3912100105	주상변압기	VR포함	○
				3912100106	철도용단권변압기		○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1,000KVA 이하에 한함	○
				3912103001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
				3912103002	일반지상변압기		○
				3912106001	전지형에너지 저장장치(BESS)	1. 전력변환장치(PCS) 출력 용량 250kW 이하에 한함 2. 가정용(일반가정에서 사용) 및 배전용(한국전력 등 배전선로에 사용)은 제외	○
		391211	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3912110101	분전반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	391211	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3912110301	폐쇄형배전반		○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
				3912110603	최대수요전력 제어기		○
				3912110604	모니터링장치		○
				3912110605	전력보호감시장치		○
				3912110606	집중표시제어장치		○
				3912110701	가로등자동점멸기		○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1. 통합감시제어설비포함 2. 일일처리용량으로 하폐수는 10만톤, 상수는 30만톤 이하의 수처리 설비에 한함(일일 처리용량 신설 설비에 적용)	○
				3912119801	프로그래머블로 직컨트롤러	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391218	인텔리전트 빌딩설비	3912180101	빌딩자동 제어장치		○
		391317	배선관로 및 버스웨이	3913170401	케이블트레이		○
				3913170501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
				3913170606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		○
				3913170607	합성수지제가요 전선관		○
40	배관유체 조절시스템 장비 및 부품	401016	공기 순환장치 및 액세서리	4010160101	송풍기		○
				4010160201	공기순환기	공공분양주택, 분양 임대 무작위 혼합된 주택은 제외	○
		401017	냉방장치	4010170801	팬코일유닛		○
				4010170901	공기조화기		○
				4010171201	스크루냉동기		○
				4010171601	냉각탑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40	배관유체 조절시스템 장비 및 부품	401018	난방기구 및 액세서리	4010180201	원통다관식 열교환기		○
				4010180202	판형열교환기		○
		401019	습도조절 장치	4010190201	제습기		○
		401020	보일러	4010200201	수관보일러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
				4010200601	폐열보일러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
				4010209501	간접가열보일러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
		401416	밸브	4014161501	플랩밸브		○
				4014162001	버터플라이밸브		○
				4014168801	체크밸브		○
				4014169401	제수밸브		○
		401417	배관금속 부품 및 설비	4014178201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
				4014178203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
				4014178401	수문문비	수문 1련당 면적 20㎡ 이하에 한함	○
				4014178402	수문문틀	수문 1련당 면적 20㎡ 이하에 한함	○
				4014178403	수문밸브		○
				4014178601	수량계보호통		○
				4014178901	폴리에틸렌 제물받이		○
		401421	관류	40142109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외	○
				4014210902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40	배관유체 조절시스템 장비 및 부품	401421	관류	4014212301	파형강관		○
				4014218501	비압력용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연간 구매예정수량 20% 이내에서 예외	○
				4014218502	압력용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연간 구매예정수량 20% 이내에서 예외	○
				4014218902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1. 가스관 또는 송유관은 제외 2. 분체라이닝식 강관은 제외	○
				4014219701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401421970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401423	관이음자재	4014231201	신축관이음		○
				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 강관이음관	1. 가스관 또는 송유관은 제외 2. 분체라이닝식 강관은 제외	○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
				4014239601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 비닐이음관	1. 공동주택용 200φ 이하 제외 2. 연간 구매예정수량 20% 이내에서 예외	○
				4014239604	일반용 경질폴리염화 비닐제부속품		○
		401515	펌프류	4015150301	다단벌류트펌프	1. 상수도용 배관직경 500mm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제품은 제외	○
				4015150302	단단벌류트펌프	1. 상수도용 배관직경 5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천연가스 (LNG)용제품은 제외	○
				4015150303	양흡입벌류트펌프	1. 상수도용 배관직경 500mm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천연가스 (LNG)용제품은 제외	○
				4015150304	편흡입벌류트펌프	1. 상수도용 배관직경 500mm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천연가스 (LNG)용제품은 제외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40	배관유체 조절시스템 장비 및 부품	401515	펌프류	4015150501	정량펌프		○
				4015151301	수중펌프	1. 상수도용 배관직경 1,2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천연가스 (LNG)용제품은 제외	○
				4015151701	오수펌프		○
				4015152501	슬러지펌프		○
				4015154601	입축축류펌프	1. 상수도용 배관직경 1,2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천연가스 (LNG)용제품은 제외	○
				4015154701	심정용펌프		○
				4015155301	전진공동펌프		○
				4015156601	부스터펌프		○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	상수도용 배관직경 1,200mm 미만에 한함	○
				4015157002	횡축사류펌프	상수도용 배관직경 1,200mm 미만에 한함	○
		401615	필터류	4016150201	워터필터		○
				4016150301	전기집진장치		○
				4016150306	제진장치		○
				4016150501	공기여과기	에어필터(프리필터, 미дум, 헤파필터), 자동공기여과장치포함	○
				4016150801	백필터		○
		401616	정화장치	4016160501	탈취기		○
				4016160701	배연탈황기		○
				4016169901	공기살균기		
		401617	분리기	4016170101	원심분리기	수처리용 및 음식물처리장용 제품에 한함	○
		401725	관연결자재	4017259801	파형강관이음관		○
41	실험실용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411032	실험용 세척 및 청소장비	4110320201	실험용세척기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41	실험실용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411034	실험실용 환경 조절장치	4110340601	무균함		
				4110341801	대형온습도 환경조성실		
				4110349101	항온항습조		
		411035	실험용 환기장치 및 액세서리	4110350201	실험실용배기기		
		411042	실험실용 용수정화 장비 및 용품	4110420601	초순수제조기		
		411044	실험용 배양장비	4110440501	진탕배양기		
		411045	실험용 오븐 및 액세서리	4110451001	건조기		
		411046	실험용 가열로 및 액세서리	4110460101	실험실용전기로		
		411067	식물 연구장비 및 액세서리	4110670501	식물생장조절실		
		411124	압력측정 및제어용 기기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	상하수 측정용 계측기 포함	○
		411125	유체측정용 기기	4111250101	유량계	휴대용 유량계 제외	○
				4111250401	수도미터		○
		411136	전기계측기	4111368901	종합계측기		
42	의료용기기	421819	급성질환자 모니터링 장치 및 관련제품	4218190401	환자감시장치		
		422815	고압증기 멸균기, 살균기기 및 액세서리	4228159601	고압멸균기		
43	정보기술 방송및통신기	431915	개인 통신장치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소방 관련 기관 공급용 제품은 제외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43	정보기술 방송및통신기	432018	매체 저장장치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 제품에 한함	
		432115	컴퓨터	4321150102	컴퓨터서버	x86 아키텍처 기반 CPU 1개 전체, CPU 2개 중 Clock 3.0GHz 이하 제품에 한함	
				4321150701	데스크톱컴퓨터		
				4321151402	무인안내시스템		○
				4321151403	버스및차량정보 안내장치		○
				4321159301	일체형컴퓨터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		
		432215	클 매지니먼트 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4322150101	자동안내장치		○
				4322152101	원격접속장치		○
		432217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4	무선통신송신기		
				4322173301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공동주택 유선방식 제외	○
		432218	광네트워크 장치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
		432226	네트워크 서비스장비	4322269601	동보장치		○
				4322269602	마을무선방송장치		○
		432228	전화장비	4322281705	지하재방송장치		○
				4322281805	통합배선반		○
				4322289701	주파수 분할다중화 장치		○
44	사무용기기 액세서리 및 용품	441031	인쇄기, 팩스 및 복사기 공급용품	4410310301	재제조토너	페카트리지에 토너를 충전하는 재생토너는 제외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44	사무용기기 액세서리 및 용품	441119	칠판	4411190701	게시판 또는 액세서리		○
				4411191101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
		441120	일정관리 용품	4411200201	달력		
		441215	우편용품	4412150401	창봉투		
45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451116	영사기 및 소모품	4511160301	영사용스크린		
				4511169701	영사대		
		451117	오디오 프리젠테이션 및 창작장비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		○
		451118	복합 영상장비 및 컨트롤러	4511181001	실물화상기		
				4511189301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멀티형 비디오월 제외, 단독형 600cd/m <sup>2</sup> 미만에 한함	○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61615	교통통제 장비	4616150401	교통신호등		○
				4616150403	교통신호제어기		○
				4616150407	바닥형보행신호등		○
				4616151601	차량번호판독기	주차단속 및 보안용 제품에 한함	○
				4616152604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4616157001	도로안전표지판 지주		○
				4616157201	신호등주		○
				4616157901	교통관제시스템		
				4616158501	도로표지병		○
				4616159101	종합폴		○
		461716	감시 및 탐지장비	4617160401	비상경보기		○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총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제외	○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총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제외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61716	감시 및 탐지장비	4617168501	무인교통감시장치		○
		461815	보호용의류	4618150701	야광조끼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4618150902	농약안전사용장비		
				4618150903	화학물질보호복	4~6형식에 한함	
				4618152801	안전용덧옷	방사능 보호복은 제외	
				4618159901	산불진화복		
		461820	호흡보호 장비	4618200103	보건용마스크		
				4618200107	비말차단용마스크		
		461824	정화기기 및 안전청결 장비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461825	개인 보호장비 또는 무기	4618250401	화재수신기		○
		461915	화재예방 장비	4619159601	단독경보형감지기		○
		461916	화재진압 장비	4619160101	수동식소화기		
				4619160102	소화전		○
				4619160111	자동식소화기		
				4619160302	소방호스		○
47	위생장비 및 용품	471015	수처리 및 공급장비	4710150102	활성탄공급장치		○
				4710150501	염소투입기		○
				4710150502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
				4710151201	교반기		○
				4710151202	혼합기		○
				4710151701	자외선살균기		○
				4710152201	일체형폐수처리 장치		○
				4710152501	벨트프레스탈수기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47	위생장비 및 용품	471015	수처리 및 공급장비	4710152502	스크루프레스형 탈수기		○
				4710152503	디칸터형원심 탈수기		○
				4710152504	원심농축기		○
				4710152505	필터프레스탈수기		○
				4710152507	디스크형농축기		○
				4710152901	소각로	1. 일일처리용량 70ton/일 이하에 한함 2. 가스냉각장치, 유해가스저감장치포함	○
				4710153501	오수정화장치	본체가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
				4710153601	슬러지수집기		○
				4710154201	부상분리장치		○
		471016	용수처리 용품	4710160803	폴리염화알루미늄		
		471099	용수처리 및 공급장비	4710996001	약품투입기		○
				4710996401	오수처리용산기 장치		○
				4710996402	정수처리용산기 장치		○
				4710996501	침사인양기		○
				4710997001	상향류식여과장치		○
				4710997201	섬유여과기		○
				4710997601	경사판침강장치		○
				4710997801	협잡물처리기		○
				4710997901	드럼스크린		○
				4710998001	제진기		○
				4710998701	평면스크린		○
				4710998901	호퍼	슬러지 저장용 탱크 및 사일로에 한함	○
				4710999201	응집기		○
				4710999801	스컴제거기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47	위생장비 및 용품	471217	쓰레기용기 및 액세서리	4712170101	쓰레기봉투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제품에 한함	
				4712170201	쓰레기통		
				4712170202	음식물쓰레기 처리통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48	서비스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	481015	상업용조리 기기	4810151101	부침기		
				4810151701	상업용오븐	용량 35L 이하 제품 제외	
				4810152101	상업용가스레인지		
				4810153002	취반기		
		481016	상업용 식료품 가공기기	4810161501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7	상업용 식음료품 조제기기	4810171001	음수기		
				4810179901	정수기		
		481018	상업용 취사도구 및 주방기구	4810181801	주방기구소독기		
				4810189601	상업용주방후드		○
		481020	식당용가구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4810209601	상업용싱크대		○
				4810209701	배식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가정용 가스레인지대, 복합취사대에 한함(상업용 제외)	○
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용품 및 액세서리	491215	캠핑용품	4912150301	야영용텐트	국방규격에 한함	
				4912150302	지주식천막		
				4912150401	침낭		
				4912159601	천막용 방수포		
		492015	유산소운동 기구	4920150101	트레드밀		
		492016	근력강화용 헬스기구	4920160301	레그프레스머신		
				4920160302	레그익스텐션머신		
				4920160303	레그컬머신		
				4920160311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		
				4920160501	벤치프레스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용품 및 액세서리	492016	근력강화용 헬스기구	4920160506	체스트웨이트		
				4920160508	랫풀다운머신		
				4920160511	스미스머신		
				4920161101	종합운동기구		
				4920169701	야외운동기구	1. 야외헬스기구에 한함 2. 산책로 설치 포함 3.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492215	스포츠 액세서리	4922150101	전광스코어보드		○
				4922158401	농구대		
		492415	운동장 및 놀이터용 장비	4924151101	퍼걸러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4924159601	기타조경시설물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4924159701	조합놀이대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501120	가공육류 및 조리육류	5011209901	식육가공품	국방규격에 따른 제품은 돈까스, 미트볼, 햄, 소시지(비엔나 소시지는 제외), 탕수육, 팝콘형치킨에 한함	
				5011209902	불고기패티	국방규격 제품에 한함	
		501215	신선 또는 냉동한어류 및 어류 부산물	5012159802	어육가공품	생선묵 튀김제품에 한함	
				5012159804	새우패티		
		501218	해조류	5012180401	조미김	맛김에 한함	
		501718	각종소스류	5017183101	요리용소스	자장소스에 한함	
				5017183102	카레	군납제외	
		501720	장류	5017200101	간장	혼합간장에 한함	
				5017200201	고추장		
				5017200301	된장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501819	빵, 비스킷 및 쿠키	5018190101	신선탄빵		
				5018190201	냉동빵		
				5018190401	말린빵		
				5018190502	건빵		
				5018190601	상온보관용빵		
		501929	파스타 및 면류	5019290201	면류	자장면, 쫄면, 물냉면, 비빔냉면, 가락국수, 당면, 즉석쌀국수에 한함	
		504670	통조림 또는 김치	5046700101	배추김치		
				5046700201	열무김치		
				5046700401	총각김치		
				5046700501	깍두기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521215	침구류	5212150201	이불		
				5212150301	이불커버		
				5212150401	매트리스커버		
				5212150501	베개		
				5212150601	요		
				5212150801	담요		
				5212150901	시트		
		521217	타월	5212170301	타월		
		521315	커튼 및 긴커튼	5213150101	커튼		
		521316	블라인드 및 차양	5213160101	베니션블라인드		
				5213160201	롤업셰이드		
				5213160401	버티컬블라인드		
		521419	기타분류가 안된 가정용소품	국방규격/ 경찰규격	구급대, 수통피, 야전삽피, 탄입대류		
				국방규격	기동, 총포, 통신, 일반장비카바류		
		521516	가정용주방 용구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외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521522	설거지 및 식기수납 보조용품	5215220201	식기건조대		○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 용품	531018	코트 및 재킷	5310180201	남성용외투		
				5310180401	여성용외투		
		531023	속옷	5310230301	삼각팬티		
				5310230302	사각팬티		
				5310239901	내복		
		531024	양말류	5310240201	양말		
		531025	의류 엑세서리	5310250101	벨트		
				5310250102	요대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5310250401	장갑		
		531027	유니폼	5310270101	전투복		
				5310270102	군용근무복		
				5310270103	군용정복		
				5310270104	군용비행복		
				5310270105	군용외투		
				5310270108	군용전투조끼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5310270201	남자정복		
				5310270202	여자정복		
				5310271001	남자근무복		
				5310271002	여자근무복		
				5310271003	남자작업복		
				5310271004	여자작업복		
				5310279802	소방용기동복		
				5310279901	기동복		
		531029	운동복	5310290101	여성용운동복		
				5310290201	남성용운동복		
		531215	여행가방	5312150301	개인용소형가방		
				5312159901	의류대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531216	지갑, 핸드백 및 일반백	5312160301	배낭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54	시계, 보석 및 원석제품	541115	휴대용시계	5411150101	손목시계		
55	출판물	551015	인쇄출판물	5510150401	신문		
				5510150901	교재		
				5510151001	서적		
				5510151501	연감		
				5510151901	정기간행물		
				5510152001	팸플릿		
				5510152101	편람		
				5510152901	통장		
				5510159901	기타인쇄물		
		551216	라벨	5512161201	라벨용지	인쇄기용에 한함	
				5512161203	일반인쇄스티커		
				5512161204	실사출력 인쇄스티커		
		551217	신호표지	5512170401	갈매기표지판		○
				5512170601	현수막		
				5512171001	교통안전표지		○
				5512171002	도로표지		○
				5512171701	건물번호판		
				5512171702	도로명판		
				5512171801	안내판		○
		551219	표식장비	5512190301	안내전광판	픽셀간격 1mm 이하 마이크로 LED 제외	○
				5512190302	기상전광판		○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		○
				5512190401	간판		○
				5512190801	안내판걸이구		
				5512190802	전시대		
56	가구 및 관련제품	561015	가구	5610150201	소파		○
				5610150701	책장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56	가구 및 관련제품	561015	가구	5610150801	매트리스	라텍스매트리스 제외	
				5610151501	침대		○
				5610151601	장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5610151901	응접탁자		
				5610152001	사물함	금속 또는 목재 소재의 제품에 한함	○
				5610152003	군용사물함	금속 또는 목재 소재의 제품에 한함	○
				5610153001	캐비닛		○
				5610153101	신발장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5610153801	찬장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
				5610154201	접이식의자		○
				5610154301	식탁		○
				5610159201	청소도구함		
		561016	옥외용가구	5610160501	옥외용벤치		○
		561017	사무용가구	5610170301	책상		○
				5610170601	회의용탁자		○
				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
				5610179301	보조책상		○
		561116	패널시스템	5611160101	사무실칸막이		○
		561121	좌석	5611210201	작업용의자		○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
				5611210601	스툴의자		○
				5611210801	책걸상		○
		561210	도서관가구	5612100201	카운터		○
				5612109901	이동식서가		○
		561215	교실용가구	5612150101	실습대		
				5612150201	교실용걸상		○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56	가구 및 관련제품	561215	교실용가구	5612150501	수강용탁자		○
				5612150601	학생용책상		○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
				5612150801	컴퓨터책상		○
				5612159801	교탁		
		561217	교실용서적 및 기타 물품보관 장비	5612179801	철판보조장		
		561218	직업 교육시설 및 설비	5612180401	강연대		
		561219	전시용가구	5612190201	전시용진열대		○
				5612190301	수장고용수납장		○
		561220	연구실용 가구	5612200101	실험대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5612200202	약품장		
				5612200401	실험실용싱크대		
60	악기, 게임, 장난감, 미술작품, 공예품, 교육용장비, 교재, 교육용품 및 교육용보조품	601047	에너지 및 힘물리학 교재	6010478701	유압제어실험장치		
		601047	에너지 및 힘물리학 교재	6010479801	신재생에너지 실험장치		
		601061	직업교육 자료	6010610101	엔진모의장치		
				6010610401	전기전자교육자료		
		601062	기술교육 자료	6010621401	교육용로봇		
				6010629901	공정제어실험장치		
		601064	전자공학 교육장비 및 용품	6010640202	정보통신망 실습장비		
				6010649801	전자회로실험장치		
		601093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및 용품	6010939901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6010939902	수업자동녹화 시스템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60	악기, 게임, 장난감, 미술작품, 공예품, 교육용장비, 교재, 교육용품 및 교육용보조품	601098	학습교구	6010989901	실물모형및전시물		○
		601099	교육훈련 장비 및 용품	6010999901	교육훈련장비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601210	예술품	6012100201	조형물		
72	건물시설물 건설유지보수 서비스	721540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 용역	7215401001	승강기유지보수 서비스		
				7215409901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1. 해외전시회 포함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회 및 전시회부 대행사용 전시부스 설치 서비스 등을 포함	
				7215409902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1. 해외전시회 포함.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따른 전시회 및 전시회부 대행사용 전시홍보관 설치 서비스 등을 포함	
76	산업위생관련 서비스	761115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	7611150101	<b>건물청소서비스</b>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제외	
78	운송과보관 및 우편관련 서비스	781118	도로수송	7811189901	공공기관통근운송 서비스		
				7811189902	<b>통학운송서비스</b>		
				7811189904	기타도로여객운송 서비스		
80	경영관련 서비스	801416	판매 및 판촉활동	8014162201	우편발송서비스		
		801419	<b>전시회, 회의 및 행사대행 서비스</b>	8014190201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80141988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8901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811015	토목공학	8110159601	유수율제고서비스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81111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업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7	경영정보 시스템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8	시스템관리	8111181101	운영위탁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20	데이터 서비스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200202	빅데이터분석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21	인터넷 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22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516	지도작성법	8115160401	측량용역	1. 건설공사설계관련 '공간 정보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에 한정 2. 위의 측량항목 중 도로, 철도(지하철포함), 지중송·배전 전력구, 하천, 광역·공업용 수도 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함	
				8115169901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	1. 20억 미만에 한함(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2. 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 수치지도, 정사 영상지도 제작 등의 기초활동포함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811517	지질학	8115179901	지질연구조사 서비스	1. 1천만원 이상의 지질관련용역에 한함 2. 노선사업은 1천만원 이상의 실시설계에 한함	
82	편집디자인 그래픽 및 예술관련 서비스	821316	사진사 및 촬영사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	공공기관 홍보용(제작 의뢰한 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모두 해당)에 한함	
		821415	아트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 서비스		
90	여행,음식, 숙박 및 오락관련 서비스	901518	축제	9015189001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추정가격 1억원 미만에 한함	
92	국방 및 치안관련 서비스	921215	경계서비스	9212159901	시설물경비서비스	1.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업, 기계경비업은 제외 2.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지정 내역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명번호	세부분류명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81111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업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7	경영정보 시스템	8111179901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8	시스템관리	8111181101	운영위탁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811120	데이터 서비스	8111200202	빅데이터분석 서비스	20억원 미만에 한함(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 부칙 <제2023-7호, 2023.2.1.>

1. 동 지정내역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4호(2022.4.1.)를 폐지한다.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3년 2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5. 제품의 분류 및 해석
  - ① 제품의 분류 및 해석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에 따르며,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 계약방법) 적용 여부는 판로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검토에 따른다.
  -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동 지정내역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2060호)」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내 상품정보시스템에 따른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2. 10. 17.]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2호, 2022. 9. 2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 방향에 맞게 신인도를 조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용어를 정비 및 별표·서식을 간소화 함
- 유사 중복 적용 방지를 위한 신인도 조정
  - (신인도 검토기준 신설) 매년 신인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인도의 적용기간을 신설
  - (세부항목 및 등급 재분류) 유사 평가등급을 평가요소와 심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평가요소별 1개 세부항목 및 등급만 인정
  - (신인도 신설·조정) 명문장수기업(2점)에 대한 가점은 신설하고,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신인도 적용 범위를 조정
  - (신인도 삭제) 낙찰 하한율을 낮추는 수출우수기업의 한도외 가점 및 이중제재 우려가 있는 감점, 종료된 정책 관련 신인도 삭제
- 모호한 규정·용어 정비 및 별표·서식 간소화
  - (규정 명확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한 제재, 합병·분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준 등 적용·해석상 모호한 규정 정비
  - (별표·서식 간소화) 추정가격별 심사기준을 정한 별표를 배치하고, 별표를 11종에서 4종으로, 별지 서식을 8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

### ▣ 고시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3. 계산결과와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 ~ -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안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72호,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17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2년 10월 16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9호)’ 규정을 적용한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 7. 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 주요내용

#### 가. 조달기업 부담완화

-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 나.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기간 불일치 조정

#### 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 ④ 규정 해석·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

### ▣ 붙임

가.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나.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다. [별지 제10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 가. A형

-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2)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 나. B형

-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7.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가격

##### 1) A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 = 배점 × {1 - 2 × ( $\frac{\text{제안가격}}{\text{제안평균가격}} - \frac{95}{100}$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 2) B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을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 = 배점 × {1 - 2 × ( $\frac{\text{제안율}}{\text{평균제안율}} - \frac{95}{100}$ )}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text{평점(점)} = \text{배점} \times \left(1 - \frac{\text{납기지체율}(\%)}{4}\right)$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text{납기지체율}(\%) = \frac{\text{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text{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times 100$$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평가 대상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배점 × 1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배점 × 0.8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 1)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3)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igma \left( \frac{\text{세부품명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세부품명별 평점} \right)$$

## 라. 신인도

###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5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3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2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나. 담합에 참여한 자	5
허위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5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3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피해를 가한 자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3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8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3

####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점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 자)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6) 일자리의 질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인증구분	인증내용	인증 유효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쇼핑몰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u>(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는 허용)</u>	<u>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u>

## 7) 기술 인증

구분	인증 종류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1점
일반·녹색기술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 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 <u>(통상실시권은 불인정)</u> ,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u>+0.5점</u>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가점} = \Sigma \left( \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가점} \right)$$

## 마. 선호도

- 1) 선호도는 관련 법령·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 바.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여부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u>0.2</u>

- 1)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igma \left( \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 3)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 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 가목의 '물품·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 사. 납품기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text{평점(점)} = \text{배점} \times \left\{ 1 - \frac{(\text{업체제시납품기한} - \text{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text{계약납품기한}} \right\}$

- 1) 납품기일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제안요청 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세부품명의 전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 계약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한다.
- 3)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일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일을 입력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 납품기한보다 연장된 납품기일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일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을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 \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 자.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 = 배점 × $\left( \frac{\text{납품금액}}{\text{구매예정금액}} \right)$
	납품수량	평점(점) = 배점 × $\left( \frac{\text{납품수량}}{\text{구매예정수량}} \right)$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 \frac{\text{세부품명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세부품명별 평점} \right)$$

## 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카.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 \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 타.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4

-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 \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표준평가방식 I〉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b>품질관리</b>	<b>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b>	<b>10점</b>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b>경영상태</b>	<b>업체 신용평가등급</b>	<b>5점</b>
	<b>약자지원</b>	<b>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b>	<b>5점</b>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 〈표준평가방식 II〉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b>품질관리</b>	<b>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b>	<b>15점</b>
	<b>납품실적</b>	<b>해당 제품 납품실적</b>	<b>5점</b>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b>수출기업 지원</b>	<b>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b>	<b>5점</b>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u>품질관리</u>	<u>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u>	<u>15점</u>
	<u>사후관리</u>	<u>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u>	<u>5점</u>
	<u>경영상태</u>	<u>업체 신용평가등급</u>	<u>5점</u>
	<u>약자지원</u>	<u>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u>	<u>5점</u>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II〉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I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u>품질관리</u>	<u>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u>	<u>20점</u>
	<u>납품실적</u>	<u>해당 제품 납품실적</u>	<u>5점</u>
	<u>사후관리</u>	<u>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u>	<u>5점</u>
	<u>수출기업 지원</u>	<u>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u>	<u>5점</u>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2조의3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희망 규격, 수량,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치비’가 아닌 ‘별도구매’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종합쇼핑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1항의 공고기간 종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기본평가항목 및 선택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 (예시) 가. 1순위자~4순위자가 각 1인, 5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5순위자까지 총 7인

나. 1순위자가 1인, 2순위자가 2인, 3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3순위자까지 총 6인

다. 1순위자가 7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1순위자 7인

2. **[별표 5]**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규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서 제출)**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규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제5조(제안품목의 구성)**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규정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및 납품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선호도' 평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을 '가격' 평가의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을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제안공고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취소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동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제안공고, 제안요청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공고서 입력오류 등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의2** 각 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57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0호 서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및 납품지역

세부품명	구매희망규격	구매예정 수량	납품지역 (시.군.구까지 표기)
(예시) 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400	대전광역시 서구

4. 예산액 :
5.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6. 제안서 제출기한 : 20 년 00월 0일 시 00분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 유의사항

1. 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첨 2]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을 따릅니다.
2. 이 공고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요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이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시행 2022. 12. 26.] [조달청지침 제13294호, 2022. 12. 26.,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 행사대행용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및 조달환경 조성
- 안전 재난관리 항목 평가 강화

### ■ 주요내용

1. 행사대행용역 계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후정산, 과도한 추가협상 요구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2.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권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반영
3. 조달청 제안서평가에서만 적용되던 안전·재난관리 항목을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에도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력

### ■ 지침 내용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 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 문서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
9. “사후정산”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행사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
11. “현장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해당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협력업체”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 제2장 조달요청서 작성 및 검토

**제3조(예산산출내역서 작성)** ① 수요기관의 장이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행사용역의 일반관리비율 8%와 이윤율 10%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사대행용역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별표2>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를 따르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④ “현장인력인건비”는 행사기간 동안 행사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으로서 경비에 반영하며, 그 비용은 제5항의 기준단가에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인력인건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특수분야 인력의 경우 실비를, 단순분야 인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임금 중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적용하되, 투입기간은 행사 전·후 처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와 같이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만을 수요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익사업(등록비용 부과, 부스 또는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계약방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④ 수요기관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출항목 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⑤ 수요기관은 행사장 조성, 참가자 관리 등 주요 과업과 관련된 항목(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한다.

**제5조(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사대행용역을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항목에 이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제77조에 따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제3장 사업자 선정

**제8조(입찰공고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9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수요기관은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가 적정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기준)** ① 조달청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도 안전·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행사대행용역의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배점은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제안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과정에서 당초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도록 하거나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할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을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음에도無理하게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
2. 부당하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 요구
3. 제안내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
4. 부당한 기술이전 요구

5. 추가인력 투입 요구
6. 하자기간 연장 요구
7. 사업예산에 계상 없이 작업장소 등 추가확보 요구
8. 지나친 협상기간 및 사업자 선정 기간 지연
9. 다른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 교체를 요구
11. 후순위 업체 선정을 위해 과도한 기술협상 제시
12. 부당한 사후정산조건 요구

③ 수요기관은 협상을 할 때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홍보비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제4장 용역계약의 이행 및 관리

**제1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의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제1항의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되 계약서 등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착수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해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 관리)**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이 가능한 행사대행용역인 경우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하도급 허용 여부와 승인요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문서로 수요기관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신청 받은 경우 제1항에서 제시한

승인요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수요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할 수 있다.

⑥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인력의 투입·교체 및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업무태만 등으로 용역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
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 ⑤ 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인력투입 및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⑥ 수요기관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감독 및 관리가 계약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부당한 인력파견 요청 금지)** 수요기관은 해당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행사대행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적법성 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①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항공,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단, 최소인원 보장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그 밖에 관계법령,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 포함)에 사후정산 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시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과 비용 지출 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한 차액의 조정이나 수요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정산비용(비용인정 요건 등) 및 정산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⑥ 사후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등의 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2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 등)** ①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3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 이전에 취득하여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해당 계약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권을 설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 입찰에 참가한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계약문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적용 및 과업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조건이나 방법, 환경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94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사후정산 가능여부

경비세항목	정산여부	사유
대관비, 행사장 전시 및 무대설치비, 시스템 및 기자재 대여비, 회의비, 출장비, 현장사무국 운영비, 인쇄(제작)비, 홍보비, 수송비, 보험비, 초청연사사례비, 상금, 식·음료비, 행사기념품, 공연비, 현장인력인건비	불가	사전확정 가능
항공료, 숙박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변동은 정산으로 처리</li> <li>• 항공권, 객실 수는 수정계약</li> </ul>

주) 이 표는 참고사항이며, 실제 정산여부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3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6조의4)**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22조의5 신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 **(제28조의6제1항)**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 **(제29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
- **(제45조의2 신설)**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 **신구법 비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p><b>제3조(기준보수)</b> ① <b>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b>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b>근로형태 및 보수수준</b>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b>제3조(기준보수)</b> ①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b>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b>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b>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b> 할 수 있다.</p> <p>1. <b>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b></p> <p>2. <b>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b></p> <p>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b>근로·노무 형태, 보수·보수액 수준</b>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b>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b> ① 공단이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 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b>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b>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p>	<p><b>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b> ① 공단이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 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b>예술인</b>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p>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b>지급한 보수</b>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b>적용기간</b>, <b>하한액 기준</b>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④ (생략)</p>	<p>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b>지급한 보수·보수액</b>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b>적용기간</b>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lt;단서 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b>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b> 경우</li> <li><b>근로자가</b>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li> <li>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b>사유에</b>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li> </ol>	<p><b>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b>고용된</b> 경우</li> <li><b>근로자가 월의 중간에</b>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li> <li>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b>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b> 경우</li> </ol>
<p><b>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b> ① ~ ④ (생략)</p> <p>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b>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b>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⑥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b> ① 공단은 제16조의10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b>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b>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 ④ (생략)</p>	<p><b>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b> ① 공단은 제16조의10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b>노무제공자의</b>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p>〈신 설〉</p>	<p>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b>사업주</b>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b>사업주</b>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p> <p>1. ~ 6. (생 략)</p> <p>② ~ ⑧ (생 략)</p>	<p>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b>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b>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b>납부의무자</b>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생 략)</p> <p>② 건강보험공단은 <b>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b>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b>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b>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 략)</p>	<p>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건강보험공단은 <b>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b>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b>해당 보험료등</b>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p>	<p>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p>
<p><b>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b>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b>2년</b>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b>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b>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⑤ (생 략)</p>	<p><b>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b>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b>1년</b>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b>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b>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b>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b> ① 보험료등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p>
<p>〈신 설〉</p>	<p><b>제45조의2(소액 처리)</b>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b>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b> ① ~ ⑦ (생 략)</p> <p>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1. (생 략)</p>	<p><b>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b>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19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p>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p> <p>3. 4. (생략)</p>	<p>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p> <p>3. 4. (현행과 같음)</p>
<p><b>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생략)</b></p> <p>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 ⑦ (생략)</p> <p>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1. (생략)</p> <p>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부담비율은 제외한다)·제4항제2호(보험료의 부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 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p> <p>3. 4. (생략)</p>	<p><b>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b></p> <p>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부담비율은 제외한다)·제4항제2호(보험료의 부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 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p> <p>3. 4. (현행과 같음)</p>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2호, 2021. 8. 1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
-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신구법비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693호, 2019. 12. 3.,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8382호, 2021. 8. 10., 일부개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신 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또는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p>
<p>〈신 설〉</p>	<p><b>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li> <li>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li> <li>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693호, 2019. 12. 3.,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8382호, 2021. 8. 10., 일부개정]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b>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b>활성화</b> 및 <b>유통 선진화</b> 지원</p> <p>5. ~ 10. (생략)</p>	<p><b>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b>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b>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b> 지원</p> <p>5. ~ 10. (현행과 같음)</p>
<p><b>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b> ① (생략)</p> <p>② 발행일부터 <b>18개월</b>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삭제</p> <p>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p> <p>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p> <p>4. 삭제</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p> <p>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물품</p> <p>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p> <p>3. 할인권</p> <p>4. 상품권</p>	<p><b>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b> ① (현행과 같음)</p> <p>② 발행일부터 <b>12개월</b>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b>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b></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삭제〉</p> <p>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p> <p>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p> <p>〈삭제〉</p>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693호, 2019. 12. 3.,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8382호, 2021. 8. 10., 일부개정]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p> <p>〈신 설〉</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p> <p>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품</li> <li>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li> <li>3. 할인권</li> <li>4. 상품권</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li> </ol>
<p><b>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b>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b>완화</b>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b>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b>강화·완화</b>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28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li> </ol>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신 설〉</p>	<p><b>제28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22조제4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li> <li>2.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